

2006년도
국정감사결과보고서

2006. 12.

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

목 차

I . 감사개요	1
1. 목 적	1
2. 감사기간	1
3. 감사실시 대상기관	2
4. 감사반 편성	3
5.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	4
II . 주요감사실시내용	6
1. 과학기술부소관	6
2. 정보통신부소관	54
3. 기상청소관	87
III .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	95
1. 과학기술부소관	95
2. 정보통신부소관	108
3. 기상청소관	121
IV . 특기사항	124
1. 비공개 국정감사실시	124
2. 국정감사 중 현장시찰활동	124

I. 감사개요

1. 목 적

「헌법」 제61조, 「국회법」 제127조 및 「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」(이하 “국감·조법”이라 함)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, 2007년도 예산안 심사와 법률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대안과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.

2. 감사기간 : 2006. 10. 13(금) ~ 11. 1(수) (20일간)

가. 중앙감사 : 2006. 10. 13(금) ~ 10. 16(월),
2006. 10. 19(목) ~ 10. 23(월),
2006. 10. 27(금) ~ 11. 1(수)

나. 지방감사 : 2006. 10. 17(화) ~ 10. 18(수),
2006. 10. 24(화) ~ 10. 25(수)

3. 감사실시 대상기관(총47개 기관)

가. 위원회선정기관 : 국감·조법 제7조제1호 해당기관(총 30개 기관)

과학기술부 소관(4)	정보통신부 소관(17)	기상청 소관(9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기술부 ○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보통신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상청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부속기관(2)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립중앙과학관 ○ 연구개발특구기획단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부속기관(16)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파연구소 ○ 중앙전파관리소 ○ 우정사업본부 ○ 통신위원회 ○ 정부통합전산센터 ○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○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○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○ 서울체신청 ○ 부산체신청 ○ 충청체신청 ○ 전남체신청 ○ 경북체신청 ○ 전북체신청 ○ 강원체신청 ○ 제주체신청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부속기관(8)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상연구소 ○ 부산지방기상청 ○ 광주지방기상청 ○ 대전지방기상청 ○ 강원지방기상청 ○ 제주지방기상청 ○ 항공기상대 ○ 기상통신소

나. 본회의승인대상기관 : 국감·조법 제7조제4호 해당기관(총 28개 기관)

과학기술부 소관(21)	정보통신부 소관(7)	기상청 소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과학기술원 ○ (부설)고등과학원 ○ 광주과학기술원 ○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○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○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○ 한국과학문화재단 ○ 한국수력원자력(주)영광원자력본부 ○ 기초기술연구회 ○ 산업기술연구회 ○ 공공기술연구회 ○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○ (부설)국가수리과학연구소 ○ (부설)핵융합연구센터 ○ 한국기계연구원 ○ 한국화학연구원 ○ (부설)안전성평가연구소 ○ 한국표준과학연구원 ○ 한국해양연구원 ○ (부설)극지연구소 ○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정보사회진흥원 ○ 정보통신연구진흥원 ○ 한국정보문화진흥원 ○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○ 한국정보보호진흥원 ○ 한국인터넷진흥원 ○ 한국전파진흥원 	<p>없 음</p>

4. 감사반 편성

감사반장(1인)	임 인 배 위원장	
<p>감사위원 (19인)</p>	<p>변재일위원(열린우리당) 강성종위원(") 김근태위원(") 신기남위원(") 안병엽위원(") 유승희위원(") 유시민위원(") 이석현위원(") 홍창선위원(")</p>	<p>김태환위원(한나라당) 강재섭위원(") 김영선위원(") 김희정위원(") 서상기위원(") 심재엽위원(") 전여옥위원(") 허태열위원(") 류근찬위원(비교섭단체) 박성범위원(")</p>
<p>사무보조자 (38인)</p>	<p>○ 위원회 입법보좌직원</p> <p>수석전문위원 김 춘 엽 전 문 위 원 이 진 호 입 법 조 사 관 배 용 근 " 엄 태 석 " 김 원 모 " 이 화 실 " 이 현 정 입법조사관보 서 호 진 " 남 명 진</p>	<p>○ 위원보좌관(20인)</p> <p>○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(4인)</p> <p>열린우리당 고 영 기 박 영 호 한나라당 권 순 일 채 성 령</p> <p>○ 속기직원(5인)</p> <p>속기주사 김 정 아 속기주사 서 현 숙 속기주사보 김 지 숙 속기서기 김 경 재 속기서기보 유 희 정</p>
<p>계</p>	<p>총 58 인</p>	

5.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

일 자	시간	대 상 기 관	장 소	비 고
10.13(금)	10:00	정보통신부 및 부속기관(15)	정보통신부 회의실	
10.14(토) 10.15(일)		공 휴 일		
10.16(월)	10:00	과학기술부 및 부속기관(2)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	과학기술부 회의실	
10.17(화)	10:00	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(부설)국가수리과학연구소 (부설)핵융합연구센터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(부설)안전성평가연구소	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회 의 실	※ 지방감사 (대전)
10.18(수)	10:00	공공기술연구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, (부설)극지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	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회 의 실	※ 지방감사 (대전)
10.19(목)	10:00	기상청 및 부속기관(7)	기상청 회의실	
10.20(금)	10:00	한국전산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	한국정보문화진흥원 회 의 실	
10.21(토) 10.22(일)		공 휴 일		
10.23(월)	10:00	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	한국전파진흥원 회 의 실	
10.24(화)	11:00	한국수력원자력(주)영광원자력본부	영광원자력본부 회 의 실	※ 지방감사 (전남 영광)
10.25(수)	10:00	전남체신청 광주지방기상청	전남체신청 회의실	※ 지방감사 (광주)

일 자	시간	대 상 기 관	장 소	비 고
10.26(목)	10:00	※ 자료정리 및 감사준비		
10.27(금)	10:00	한국과학기술원 (부설)고등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문화재단	국회 과학기술정보 통신위원회 회의실	
10.28(토) 10.29(일)	10:00	공 휴 일		
10.30(월)	10:00	종합감사(과학기술부, 기상청)	국회 과학기술정보 통신위원회 회의실	
10.31(화)	10:00	종합감사(정보통신부)	국회 과학기술정보 통신위원회 회의실	

Ⅱ. 주요감사실시내용

1. 과학기술부소관

가. 과학기술부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기초연구분야	<p>〈우주분야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주센터와 발사체사업 등으로는 핵심·원천기술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, 이를 위하여 장기적인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우주개발사업 내에 21세기 프론티어사업규모급의 기초연구프로그램 신설 필요 ○ 우주인 선발 관련, 최종 후보 2명 중 1명을 여성으로 선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○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나라는 지구자전으로 인해 수직발사가 사실상 부적합함에도 전남 고흥군이 선정된 문제 및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○ 우주발사체기술의 협력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위 여부 및 TSA(Technology Safeguards Agreement) 지연이외의 다른 문제점 ○ KSLV-I(Korea Space Launch Vehicle-I) 사업자 간 계약서의 비공개 여부 및 공개시 발생하는 문제점 ○ 한·러간 우주발사체 사업 계약시 우주기술보호협정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2년후 본 계약에도 없는 보호협정을 맺은 이유 ○ 사업지연(발사체 1단 등)등으로 러시아에 협력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하여 이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를 우주인 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○ 러시아의 우주발사체 기술(1단 엔진, 2단 고체엔진 등)이전이 되지 않는 등 불평등한 계약 체결 여부와 자력으로 발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메탄엔진을 국내 업체가 개발하여 수출도 가능하므로 국내 연구개발업체들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○ 모 월간지에 자력발사 지연관련 기사의 작성, 유출경위 및 내용확인(문건의 내용 및 해명자료 등) <p>〈연구사업관리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형과제들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국가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기획평가비를 선진국 수준인 3~4%로 늘리는 것에 대한 견해 ○ 연구과제가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상향식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 ○ 대형 국책연구과제의 기획자, 공청회 토론자 등을 공개 모집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○ RFP(Request For Proposal)에 대한 신청자와 평가·자문단간의 인맥관계 검토 ○ 국회 과정보위 산하에 과학기술지원사업 평가팀 한시적 운영에 대한 견해 ○ G7사업 참여 연구인력에 대한 인력DB가 허술하게 구축, 관리되고 있음 ○ 과학기술부 R&D사업투자 효율성 제고 필요 <p>〈유전체연구센터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독립적인 별도의 '국가유전체연구센터' 설치방안 검토 필요 <p>〈나노팹운영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나노종합팹센터가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문제가 많음. 운영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함.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〈특성화장려사업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소재은행을 2010년까지 분야별 거점, 지점, 수집망을 포함한 최소한의 유사연구소재의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계획 	
북핵실험관련	<p>〈위성영상촬영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리랑 2호위성이 핵실험여부 판단에 효과적인 수단이란 것을 보고한 시점과 보고대상 ○ 아리랑 2호 위성에 북한의 핵실험 탐지를 위한 열영상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○ 핵실험이 예정되었던 10.3~10.9일 기간 중 북한지역을 촬영했는지 여부와 촬영한 사진이 의미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○ 아리랑 2호위성 영상의 수요처는 어디이고, 북한 핵실험탐지에 대한 수요처의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와 어느 특정 좌표를 촬영하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○ 핵실험발표 당일(10. 9) 아리랑 2호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면서 핵실험 추정지역 촬영가능 여부 ○ 핵실험 장소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답변에서 16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추정한 장소는 단순 산악지역으로 이전 발표와 장소를 다르게 추정한 이유 <p>〈북핵실험관련 설문조사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핵실험에 관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는 적절하지 못하며 설문조사의 의도를 규명할 필요가 있음 ○ 북핵실험 관련 설문조사를 과학기술부와 협의 없이 추진한 이유 ○ 북핵실험 관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의 설문내용이 과학자가 답하기 적절할 것인지 여부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원자력분야	<p>〈북핵실험 대응체계 확립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북한 핵실험 전에 핵실험 탐지여부를 확증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했어야 함. 과학기술부차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,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산하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동해서 장비도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○핵실험 탐지장비인 사우나(SAUNA) 운용에 대한 향후 계획과 분석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여부, 핵실험 시 공중에 흩어지는 물질의 탐지와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,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과업지시 내용과 답변내용 ○10년 전부터 북한의 핵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논검출기 도입 등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문제점 ○원자력 진흥과 통제를 같은 부처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○아리랑 2호위성 촬영 실패, 기상청-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핵실험 추정장소 불일치, 핵 방사성 탐지 실패 등은 많은 문제점이 있음 ○중국은 다수(35회)의 핵실험을 수행. 일본의 핵실험 탐지 방안을 참조하고, 핵폭발시 국민들의 대응 매뉴얼 등의 개발도 필요 ○제논, 세슘 등 핵실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사능검출장비 확보 필요 ○북한 핵실험의 추정장소는 계속 변하는데 지진 강도를 나타내는 리히터 규모가 일정한 이유 ○북한의 핵실험을 탐지하기 위하여 국내 방사능 감시망을 설치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○핵실험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방사능방재 계획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할 필요 ○북한의 핵실험으로 국민적 우려가 크므로 과학기술부가 핵실험 진위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음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○북한의 핵실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때문이고, 특정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부수적인 문제라고 봄</p> <p>〈원자력안전 및 확보〉</p> <p>○울진방재센터 부지 구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경위, 울진군의 도로확장 약속 불이행 배경, 건축허가 과정 등의 문제점에 대한 자체감사 필요</p> <p>○동해의 방사능 조사 관련, 일본에 비하여 시료채취점이 적고, 일본에서는 해상보안청, 수산청 홈페이지에 채취점과 활동내용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책 필요</p> <p>○울진원전 6호기 복수기부식 원인과 이로 인한 해수유입으로 원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상황가능성 및 원자력안전과의 관계</p> <p>○복수기 튜브 전체를 티타늄이나 슈퍼스테인리스 등 하나의 재질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 및 복수기의 재질변경으로 인하여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</p> <p>○산자부의 방폐장 부지선정 관련 유공자포상 추천은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등의 건설·운영, 인·허가, 감독 및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포상이므로 이를 과학기술부가 거절했어야 함</p> <p>○원전의 사고·고장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원전 전문가의 철저한 자문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</p> <p>○지난 10. 26 보도된 하나로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원자력연구소는 매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</p>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를 위해 개선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일련의 사고가 계속되는 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행 국가 방사능방재대책은 원전사고 중심이었으나 향후 국가 방사능방재 계획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 ○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 관련 원전가동이 6개월 이상 중지되어 1,89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○ 40년 가동할 수 있는 원전설비를 30년만 가동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임. '99년 한전 공문에 의하면 20년 이상 연장운전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견해 ○ 월성원전 1호기도 수명을 5년 남겨두고 주요설비를 대규모로 정비(압력관 교체)함에 따라 원전이 2년이나 정지하게 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 ○ 우리나라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규제업무가 과학기술부·원자력안전위원회·원자력안전기술원 등 복수의 기관에 분산되고 있는데 원자력안전에 대한 규제업무의 독립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규제기관이 과학기술부와는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·독립하는 것에 대한 견해 <p>〈원자력정책 및 진흥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리 정부가 동북아를 포함한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 ○ 향후 관련 법률개정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회 이관 후에도 기금사용의 적절한 비율유지 및 지원 필요 ○ 원자력병원의 경영 수익을 R&D에 투자해야 하는데, 원자력병원은 적자 경영 상태이므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며, 원자력병원과 부설 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회계를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리나라의 핵개발 능력 및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핵무기 관련 연구개발 현황 	
<p>과학기술기반 분야</p>	<p>〈MOST투자조합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05년 감사원 감사 시, 투자조합의 부실관리 지적에 따른 위증 의혹을 제기함 ○ MOST투자조합 부실관리·운영에 따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필요 <p>〈과학문화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방송 설립을 민간에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음. 예산지원, 프로그램 제작, 과학방송이 해야 되는 영역, 새로운 분야 창출 등 과학계 자체의 문화 경영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총체적 점검 필요 ○ 지난 10월10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냈는데, 이번에도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○ 한국과학문화재단 부설로 과학방송을 설립한다는 것이 과학방송 설립·운영은 민간주도로 하고, 정부는 과학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기본방침을 바꾸는 것인지 여부 ○ 매년 민간사업자의 프로그램 및 경영 성과를 평가한다고 했는데 평가 결과가 부진할 경우의 대책 ○ 과학방송의 형식 중 '출판형 방송국'의 경우 '인하우스 방식'에 비해 제작비가 3배 가량 소요되므로, 제작이 문제가 되어 결국 사후에 영화 등으로 컨텐츠를 채우는 편법을 동원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, 이에 대한 대책 ○ 공중파 방송에 과학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낮은 이유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난 2004년 과학채널 구축을 협의했으나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 ○ 우선은 인기 과학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문화 콘텐츠에 대한 인지도가 확산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학채널을 확보하거나 과학방송국을 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임 ○ 한국과학문화재단 조직관리 등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 제기되고 있으므로 행정적, 법적인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○ 대한민국 과학문화상 선정제도에 대한 과학계의 논란과 관련하여, 과학기술부에서 대한민국 과학문화상의 권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 ○ 과학문화상 수상자 선정과정 등 과학문화사업이 정치적 이벤트화 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,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존속여부에 대한 평가작업을 거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순수 민간 기구로 재출범 시키는 등의 개편이 필요함 ○ 국립과학관 건립지역 선정이 시혜차원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·추진되어야 함 ○ 대구국립과학관 건립 관련,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지 여부 ○ 과학관 신규 건립도 중요하지만 영세한 지방 사립과학관 지원 육성이 이루어져야 함 ○ 과학기술분야에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해서라도 과학관에 대한 개인이나 법인의 출연 및 운영과 관련된 법적·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. ○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사업이 부진함에 따라 과학관이 참여는 방식이 아닌 전시중심의 이벤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트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퇴직과학자 등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참여하는 과학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립과학관에 대한 인력 및 재정,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지방과학문화 확산의 중심이 되도록 하여야 함 ○ 영호남에 국립과학관을 각각 1개소 건설하는 방침에 대한 견해 <p>〈KAIST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자원부 남북경협총괄지원팀에서 통일부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, KAIST, 표준(연) 등이 개성공단 입주를 추진했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 ○ KAIST와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의 통합 논의에 대한 보고 여부와 입장 <p>〈R&D 인력교육원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산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인력교육원 건설을 추진하다 중단됨으로 인하여 과학기술부의 신뢰도가 추락됨 ○ 이공계 인력을 KAIST 등 대학과 협력하여 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이들을 연구개발사업 평가 등에 활용하는 방안 필요 <p>〈DGIST설립사업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DGIST관련, 교육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○ DGIST관련 현재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비 타당성 검증을 실시 중인데 이로 인해 규모의 축소 및 건설 지연 우려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〈여성과학기술인 지원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기술계 여성인력의 현재 수준 ○ 여성과학기술 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 ○ 대전광역시에 여성과학기술인 지역센터가 설립되어야 하는데 설립규모 등에 관하여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○ 25개 정부출연(연)의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실적이 2004년에는 14.2%로 증가했으나, 2005년에는 13%로 감소한 원인 <p>〈비정규직 문제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원의 비정규직 문제를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함 <p>〈이공계융합교육연구센터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당초 이공계 융합교육연구센터의 계획 대비 실적 및 센터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입장 <p>〈과학영재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영재교육이 창조적 인재강국으로 연계 발전되도록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영재교육 추진과 관련 부처간 지속적인 유기적 협조 필요 ○ 과학영재육성 관련,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에 대한 병역특례적용 조치 및 추진현황 ○ 과학영재교육 관련,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동으로 R&D 예산의 일부를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 ○ 과학기술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및 각 시·도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여 과학영재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앞장서야 함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영재학교 증설관련, 서울과학고등학교 이외에 과학영재학교로의 전환을 요청하거나 신설을 추진하는 곳이 있는지 여부 ○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팀에서도 과학영재학교가 3개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, 과학영재학교 증설에 대한 견해 ○ 과학영재교육원 졸업생의 과학고등학교 진학률이 낮은 이유가 학생선발방식에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 필요 ○ 과학영재교육원 졸업생에 대해 과학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진학시 가산점을 부여하고, 특별전형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차원에서 문제가 있음 ○ 미래의 창조적 인재양성을 담당하는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계약직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○ 대통령 과학장학생 선발이 전자, 생명공학 등 특정 전공분야에 편중되고 있고, 중도탈락자들이 많으며, KAIST·서울대·포항공대 3개 대학 및 서울 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	
<p>과학기술협력 분야</p>	<p>〈남북과학기술협력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남북협력 관련, 국가비밀과 관련되는 내용을 남북공동으로 연구하는지, 안보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할 것 ○ KAIST 개성공단 입주 신청은 부적절함 <p>〈해외 과학기술협력센터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하기관의 해외사무소가 많고 방만하게 운영되므로 유기적·효율적 협조체제 구축 강화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〈한미 FTA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미 FTA 협상이 내년 3월 마무리될 예정임에도 한미 FTA 관련 용역을 내년 초까지 하는 이유 검토 ○ “한미 FTA 과학기술분야 대응방안”과제는 「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」상 위탁형, 공동연구형, 자문형 용역에 속하지 않는 편법운영 아닌지 검토 필요 ○ “한미 FTA 과학기술분야 대응방안” 연구용역비를 한미 FTA 전담팀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	
<p>연구개발조정 분야</p>	<p>〈미래성장동력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0~20년 후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기초기술분야 R&D투자 비중 25%로 확대가 필요함 ○ R&D투자관련 기초원천분야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세계 1위 제품 생산 등 단기적인 산업분야 성과 달성에는 집착하지 않아야 함 ○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단장 10명중 5명이 사업기간 중 교체됨. 10대 성장동력 관련, 사업단장은 사업종료시까지를 임기로 하여야 하며 임기동안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야 함 ○ R&D투자와 관련하여 단순 투입형이 아닌, 혁신주도형으로 전환해야 함 ○ 차세대성장동력 사업단장(1명)이 연구내용으로 창업하고 있는 바 이는 이는 부도덕하므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○ 차세대성장동력사업 관련, 일본은 7개, 대만 4개, 우리는 10개 분야를 추진 중이며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총괄조정하고 있는데 성과 우수분야와 미흡한 분야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이 2008년경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향후 후속사업 계획 및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야 함 ○ WiBro, DMB 송수신기와 같은 연구개발성과를 거두기 위해 세계시장 선점 필요 ○ 미래의 주요기술(특히, 에너지)에 대한 연구기술수준이 낮고 장비가 노후화됨 <p>〈정부출연(연) 육성·지원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부출연(연) 보유 특허기술의 민간 이양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○ 산업관련 출연(연)의 민간경영방식의 도입을 통한 연구소 체질 개선 필요. 경쟁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검토 필요 ○ 출연(연) 기관장 연봉 1억원은 연구원의 CEO 기준으로 볼 때 적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○ 출연(연)기관의 특허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음. 어떻게 할 것인지 활용여부 검토가 필요하며 연구과제 선정시 철저한 개선 필요 ○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연구장비 노후화로 국가적 차원의 첨단연구 결과의 신뢰성 저하 ○ 남극 세종기지의 노후화 장비 대체와 장비 확충으로 극지연구 강화 필요 ○ 연구기관이 불필요하게 많다고 할 수 있음. 예컨대 수소연료전지의 경우는 민간업체,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, 산업자원부가 중복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○ 국책연구기관은 민간에서는 수익성은 없으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중점 개발해야 함. '70년대식의 계획된 국책연구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함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책임연구원이 수주경쟁을 하여 과제 수주 후 비정규직 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하는 문제 ○ 민간분야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국책연구소에서 중복으로 수행하기보다는 관련 민간기관을 지원해야 함 <p>〈예산 조정·배분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 R&D 비중 산정시 '06년부터 기금을 제외한 사유 ○ 정부 R&D투자 확대에 대한 연구자들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산업부문 R&D투자를 기초연구부문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 ○ 산업자원부도 원천기술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, 과학기술부가 주도적으로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하며, 단기적 실적이나 외형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기초원천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여야 함. ○ R&D예산의 절대액수 확보를 위해 EU의 2010년 3%와 같이 획기적인 목표를 제시 필요 ○ R&D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조정권한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흡 ○ 과학기술부총리체제의 주요역할 중 하나인 기술분야별 R&D투자 비중에 대한 재검토 필요 ○ 기초연구 확대 필요 ○ R&D에 대한 종합 조정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R&D 조정기획시스템의 조기 구축필요 ○ 국가 R&D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(서면보고 요청) ○ 에너지 관련 특별회계·기금을 소관부처 사업에만 투자하고 타 부처 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음. 에너지관련 특별회계·기금의 범부처적 활용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나노 중복투자 개선 등 정부 R&D투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 ○ R&D예산 10%삭감 필요 ○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정기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 등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것 <p>〈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교통부, 국방부, 정보통신부 등 지능로봇 관련 사업의 역할을 조정·분리했는데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가 새로이 로봇사업 추진을 표명하고 있음. 과학기술부는 정보통신부·산업자원부의 로봇R&D사업의 목록만 파악할 뿐이어서 조정기능이 의문시됨. 제대로 예산배분을 해야 할 것임 ○ 대형실용화사업 민자참여 문제 관련, 자기부상열차의 경우 노선 단축으로 인한 민간참여 불리 등의 문제가 있어 타당성 검토 필요 ○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는 수요도 없이 과제선정을 추진하였는데, 타당성 결과를 제출바람 ○ 건설교통부는 경전철 표준도 정하지 못했음.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도 검토 필요 <p>〈연구관리규정 및 제도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비 유용 등 연구윤리 문제 발생시, 사후 조치 과정에서 연구사업간 또는 연구개발 관리 부처간 연계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조치 필요 ○ 연구 참여제한조치를 받은 비리 연구자들이 조치 기간 중에도 정부 부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. 비리 연구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있어 범부처적 제재 필요 ○ 부처 내부 및 타 부처 R&D 특허성과 및 특허등록의 중복신고가 많은데,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함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○ 지적재산권관리 기준 마련, 기술료 징수제도 정비, 산업R&D에 대한 WTO 위배 대비, 노후장비 조사 및 고가장비 공동 활용, 대학과 출연(연), 출연(연)간 연구인력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며, 이에 대한 법 제정 검토 필요함</p> <p>〈위성항법시스템(GNSS :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)〉</p> <p>○ GNSS 관련 과제를 한국표준과학연구원, ETRI (한국전자통신연구원) 등 6개 출연(연)에서 수행하고 있어 중복 투자가 심각하며 예산 낭비임</p> <p>○ GNSS와 같은 전부처 추진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걸러내는 Screen Group 설치 필요</p> <p>○ 과학기술부(기초핵심)는 97억원, 건설교통부(응용/인프라)는 490억원을 투입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, 같이 수행하는 것은 중복이 우려됨. 과학기술부 과제 선행 후 건설교통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, 중복성 규명과 향후 대책 마련 필요</p> <p>○ 갈릴레오프로젝트 관련 과제를 특정집단(인)이 대부분 추진하고 있어 제2의 황우석 사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시정 필요</p> <p>〈연구시설·장비 공동활용〉</p> <p>○ 연구기관 장비 중복구입을 방지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통한 DB 구축 등 종합 관리방안 필요</p> <p>○ 국산장비 구입실적 저조문제와 관련, 국산장비 쿼터제 등 시행을 통한 장비산업 활성화 필요</p>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〈나노 인프라 투자 효율화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보통신부의 USN(Ubiquitous Sensor Network) 팹 구축사업이 과학기술부·산업자원부의 나노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(국가나노팹 공동시설)과 중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에서 제외되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조정기능 한계 노출 ○ 나노 관련 장비는 연구용(종합팹)과 생산용(송도팹)의 차이가 없으므로 신규로 구축하는 것보다 기존의 종합팹 시설을 일부 보강하는 것이 효율적임 ○ 나노기술 추진 관련,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대형종합시설 개별 추진과 정통부의 USN Fab 구축 등 중복투자 조정 미흡. 산업자원부, 정보통신부 등의 중복 투자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<p>〈기초연구 비중 확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초연구비 비중산정 매뉴얼과 이에 따른 산정 결과('07예산 국회 심의 전까지 제출요청) <p>〈해양분야 R&D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심해 무인잠수정 개발은 수요는 있으나 민간참여가 없음. 한국해양연구원이 단독 연구능력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	
과학기술정책 분야	<p>〈정책연구용역사업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결과물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, 2004년 31.3%, 2005년 28.9%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들이 단순히 '정책참고자료'로 분류됨을 지적 ○ 연구결과물이 올바른 과학기술정책 수립·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 상황 점검 및 관련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〈해외R&D센터 유치관련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올해 해외 R&D센터 유치실적이 저조하며, 유치된 R&D센터 중 외국인 연구원이 없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 ○ 「해외 R&D센터 유치 특별법」 제정·발의 시 과학기술부의 협조 요망 <p>〈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과학기술 일자리 창출’에서 60만개 일자리 산출 근거 및 향후 5년 12.3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했는지 여부 ○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원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것 <p>〈이공계 인력 육성 관련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기술인력육성 관련, 이공계 우수인력이 의 학계열로 진학하는 비율이 증가함을 지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에 대한 이유 및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견해 ○ 이공계 인력 공직진출은 4·5급의 경우 많이 증가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위직(1·2급)으로 대상을 확대토록 하는 방안 필요 ○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아지는 현상에 대한 근본 대책 <p>〈과학기술정보 수집·분석 유통체계 구축 및 통계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기술정보가 부처별,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고 분류기준도 서로 달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어려우며, 국민들이 정보 이용시에도 어려움을 지적 ○ 과학기술인력 DB를 한국과학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KISTI(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)에서 NTIS(국가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)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인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중복 문제 지적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 과제 관리를 위한 통합 DB가 구축되지 않아 중복과제, 중단과제, 장비 중복 도입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관리 방안 마련 필요 ○ NTIS 구축사업의 주무부처로서 관련부처·기관의 협조를 위한 조치 필요 ○ 유사중복사업 검색용 정보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료입력 관리체계를 보완하고, 특허청이나 기술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특허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<p>〈과학기술지표 관련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R&D투자규모가 발표 자료마다 수치가 다름 - R&D통계의 일관된 작성·관리 필요 ○ OECD 연구개발 통계의 과학기술국제화 평가시 상당 부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순위가 낮은 것에 대한 대책 ○ 기술무역통계 작성 시 기술도입액과 기술수출액의 작성방법이 다른 것에 대한 대책 <p>〈지방R&D사업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사항에 대한 점검 등 지방R&D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담당할 필요가 있음 <p>〈기술유출관련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원 통제 및 경쟁사 견제를 위하여 전직희망 연구원들을 산업스파이 혐의로 고소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- 연구원의 인권침해, 규제에 의한 연구능력 저하 등에 대한 대책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술유출 문제를 연구원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학기술강국의 면모라는 생각에 대한 의견과 실행계획 <p>〈조세감면제도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' 제도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- 과학기술부의 보완 대책 및 재검토 필요 	
<p>기술혁신평가 분야</p>	<p>〈연구개발 평가정책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성과 평가시 논문의 양적평가보다는 질적 평가 강화 필요 <p>〈연구윤리·진실성 확보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연구윤리·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」의 법적 효력 강화를 위한 별도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 ○ 「연구윤리·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」 발효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대책 ○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연구윤리 자체검증 시스템의 조속한 구축 필요 <p>〈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·분석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·분석 결과에서 지방 R&D 비중산정시 기금을 제외한 사유 <p>〈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R&D 특허성과의 중복신고가 빈번하므로, 이에 대한 개선대책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〈연구개발 성과관리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국의 베이-돌 법안과 같이 국가R&D사업에서 발생한 특허 소유권을 연구단체나 연구자 등에게 주어 사장되는 특허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	
<p>국가과학기술 자문활동</p>	<p>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상과 역할에 비해 연구용역 과제의 수준과 내용이 부적절하며 대통령 자문보고 횟수가 줄고 있으므로 개선대책 마련 필요 ○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자문위원 구성시 과학기술인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40대이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	
<p>연구개발특구 육성분야</p>	<p>〈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제도 확충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덕 특구에 걸맞는 실질적인 세제혜택, 기반시설 구축 등 파격적인 정부지원 필요 <p>〈공동관리아파트 관련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덕특구내 공동관리 아파트 매각이 지연되고 있어 우범지대화 되고 수선 불가상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올해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<p>〈보육센터 관련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육시설 설계 경험 없는 업체 선정, 설계자문 미반영, 보육시설 설계 지침 미준수 등 설계과 정부터 부실이 우려되니 지속적인 관심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국립중앙 과학관	<p><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노후화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94.4%가 교체기한을 경과하여 관람객들의 외면으로 방문객 및 입장수입 감소 ○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연간 20억원 규모의 전시품 교체 예산 확보노력 필요 	

나. 직할출연기관

1) 한국과학기술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정책기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KAIST 발전구상안을 발표함에 있어서 내부구성원 의견수렴 진행방법 및 그 내용 ○ 전임 총장의 발전전략과 성공하지 못한 점을 분석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 	
기관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KAIST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시키는데 당면하는 가장 큰 난관 ○ The Times 대학평가 순위 제고 방안 ○ 사립대인 MIT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KAIST와 성격이 유사한 대학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임 ○ KAIST가 세계일류대학이 되는데 중요한 문제 ○ KAIST와 ICU(한국정보통신대학교)와의 통합 추진 상황 ○ 개성공단 입주신청 여부. 첨단연구는 관련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데 KAIST가 개성공단으로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성공단 입주신청 건과 관련한 제반 현황 파악 및 보고 요청(국감 종료 시까지 별도 보고) ○ 개성공단 기술이전 관련하여 현실을 감안한 정책 추진 필요 ○ 골프장 건설이 학생 교육에 필요한지 여부 ○ 나노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이유와 대책.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 필요 ○ 상임감사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절 문제 	
입학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단순히 외국인 학생 유치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이들이 우호적인 친한 인사로 양성되어 질 수 있도록 부가적인 사업 또는 정책 필요 ○ 해외 우수학생 유치 시 내국인이 편법 입학하는 것에 대한 시정 필요 ○ KAIST의 외국인학생 유치 현황 	
연구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외 특허 기술 이전 실적이 저조한 사유 ○ KAIST의 특허 등록 중복은 예산낭비 이전에 도덕적 문제인데 이에 대한 견해 	
안전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안전사고가 많은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 ○ KAIST 실험실 안전을 위한 보험중 일부가 학생들이 낸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○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강화 필요 	
학사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KAIST 외국인 교수 및 학생 문호 개방으로 국제경쟁력 향상 필요 ○ 상대평가인 상태에서 3.0미만인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○ 문화기술대학원의 설립 목적 및 졸업생 진출분야 ○ 학제전공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육과 연구 성과가 좋은 교수에게 급여를 많이 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. KAIST가 36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대적인 변화 필요 ○ 박사출신의 산업체 진출이 감소하고 있는데, 이에 대한 대책 	

2) (부설)고등과학원

사 항 별	주 요 질 의 요 지	비 고
예산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거대우주천체탐사연구(ODSS) 연구분야 예산 삭감여부. 기초과학 예산이 줄어들면 안됨. Quantum Leap사업은 시작되었는지 여부 	

3) 광주과학기술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실험실안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실 안전사고 관련, 최근 5년간 정부산하 연구기관 전체사고 중 KAIST와 광주과학기술원의 사고가 54.6%에 해당됨. 설문조사결과 50%이상의 연구원이 연구실 안전사고의 위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연구실 안전사고의 원인과 사고예방을 위한 향후 대책 필요 	
학사과정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광주·전남지역 과학고등학교 출신 과학영재의 역외 유출이 심각한데, 그 사유는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이 없기 때문임. 이는 광주과기원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○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을 개설하려면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 필요	
기술이전	○ 특히 유지비용에 비하여 기술이전 실적이 적음. 특히, 해외기술이전 건수가 없어 개선 필요	
사외이사겸직	○ 광주과학기술원장의 사외이사 겸직은 공직자윤리법 및 광주과학기술원 직원인사규칙 상의 타업행위금지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, 현재 겸직중인 사외이사에 대한 사퇴의사를 밝혀야 함	

4)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북한핵실험	○ 북한 핵실험이 예측된 상황하에서 핵실험측정장비의 도입이 늦은 것에 대한 향후 대책이 필요하며, 핵실험 이후 방사성물질 검출과 이에 대한 보고와 설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 ○ 북핵실험에 따른 감시능력 제고를 위해 방사선환경감시기의 확충이 필요하며, 이때 국내에서 개발한 첨단장비의 활용이 필요함	
월성현장방재지휘센터	○ 월성현장방재지휘센터 헬기장 건설과 용도폐기에 있어 관련 규정의 검토가 미흡한 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 ○ 월성현장지휘센터 배수로 축조건설비용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 전가했는지에 대한 규명 필요 ○ 현장방재지휘센터 부지매입에 있어 피규제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의 비용 분담률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울진현장방재 지휘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울진현장방재지휘센터 부지선정 및 진입도로 확보와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명확한 해결이 필요하며, 필요하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(울진군청)와의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문제의 철저한 해결이 필요 ○ 현장방재지휘센터 부지매입에 있어 피규제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의 비용 부담률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 	
고리1호기 계속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리 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발전소의 정지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가적 비용낭비를 막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음 	
방사선안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사선위치추적시스템과 관련하여 위치추적기 중 124개가 불량 판정을 받았는 바, 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와 품질 관리를 통해 방사선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 필요 ○ 방사능감시기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 및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재가 불가능한 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능물질의 탐지를 위한 탐지기 설치 유도 방안 마련 필요 ○ 일본에서와 같이 동해 방사능 감시를 수층별로 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	
방사선발생 장치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 치료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가 이원화 되어있고, 이조차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업무를 이관해 가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입장 정립 및 부처간 이견조정 결과에 대한 관심 필요 ○ 치료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며,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있어서도 최근 도입된 장치에 의해 방사선피폭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KSTAR안전 관리	○ 핵융합연구장치(KSTAR)가 핵융합연구개발의 주요한 시설임에도 방사선발생장치로 분류되어 관리되는 것은 그 중요성에 걸맞지 않기에 적절한 법·제도적 보완 및 조치 필요	
국민인식도 조사	○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매년 원자력안전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국민인식도를 실시하는데 그 결과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, 대중의 체감안전도와 기술안전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필요	
원자력안전 교육훈련	○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자력안전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, 효율적인 방사능 방재, 방호교육이 필요 ○ 원자력안전학교의 프로그램에 교육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학점교류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 필요	
여성전문인력 채용	○ 행정분야가 아닌 전문분야에서 여성전문인력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	

5)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기관업무	○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업무 중복 여부 ○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으로 원자력통제가 가능한지 여부 ○ 2006.10.20 체육행사 실시 상황(서면질의)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북한핵실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후속 핵실험에 대비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업무 및 북한 핵활동 상황판단을 위한 기술지원의 세부내용 ○ 차후 북한핵실험과 관련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역할 ○ 핵실험 관련 추후 통제기술원의 임무 개선계획 수립 요청(추후 보고 등) ○ 북한 핵활동 이후 통제기술원의 구체적인 보고 내용(서면질의) 	
이사장선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제기술원 이사장 선임 관련, 2004년 핵물질 실험사건으로 인한 IAEA 사찰과 관련된 인사로서 통제업무 수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의 우려 	

6)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연구원건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년째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으므로, DGIST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부지확보가 필요함 	
출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,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기 위한 노력 필요 	
인력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장보다 뛰어난 스타급 연구원을 영입하는 등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 노력 필요 ○ DGIST가 KAIST, GIST(광주과학기술원)와 함께 고급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 큰 축을 이루도록 나름의 계획수립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○ 당장이라도 교육기능을 갖추게 될 때 영어강의가 가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교육기능 수행능력을 사전에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	

7) 한국과학문화재단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과학문화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월간 ‘과학문화’ 7월호 환영사의 배경 이미지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가 사용된 것에 대한 대국민 공식 사과를 요구함 ○ 과학문화도시에 매년 1,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으나 서갑원 국회의원과 박기영 전 정보과학기술보좌관과 관계가 있는 일부 지역만 추가로 500만원씩 더 지원을 하는 특혜를 주는 사유(서면제출 요청) ○ 과학기술문화를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 고른 기초(펀더멘탈)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람 ○ 닦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선정에서 학술연구분야의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일반적인 기준인 SCI(Science Citation Index) 논문 게재 및 인용빈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무시된 채 선정되고 있음(학술연구분야 선정 23명 중 SCI 논문이 제출된 사람은 2명밖에 되지 않음) ○ 과학문화 NGO지원사업이 당초 선정 기본방침과 달리 1년 미만 단기과제가 100%로 단기, 단발로 끝나는 1회용 이벤트 사업이 대다수이며, 형식적인 행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. 3년 이상 지속사업의 유무는 ○ ‘과학기술 예술을 만나다’라는 사업의 내용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과학방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방송(TV) 설립을 위해 4~5년 전부터 과학기술부와 협의 및 보고를 진행해 온 한국과학문화재단을 두고, 과학기술부가 10월 10일자로 시행하고 있는 과학방송 민간 설립자 모집은 정부가 이중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○ 과학방송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부 측과 재단의 사전협의 유무 및 방송운영의 내부 검토보고서 내용 ○ 과학기술부가 한국과학문화재단 측에 과학방송 운영안을 만들라고 하고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협의하여, 7월 말경 운영안을 제출하였는지 여부 ○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방송을 시작할 경우 내년 7월 시험방송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시험방송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지 여부 ○ 과학방송은 성공할 요인이 극히 적으며 120억 원 이상의 국민세금만 낭비하다가 결국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 ○ 과학방송사업권을 확보하여 재단의 영역을 넓히고 예산을 더 확보하여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무책임한 의도는 아닌지 여부 	
영상물소유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영상콘텐츠 풀 사업예산으로 2005년 50억원, 2006년 40억원을 지원하여 제작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은 재단에서 소유해야 마땅함 ○ 고유의 영상물 제작 여부 ○ 영상콘텐츠에 대한 판권소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. 영상제작 및 방송시스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2007년 영상콘텐츠풀구축 사업예산은 삭감하여야 함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기관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재원인 과학기술진흥기금 고갈에 대한 대비책 ○ 과학기술복권 부가가치세 소송과 관련한 29억 원 납부방안 ○ 취임 후 차량 교체 건은 조직구성원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행위가 아님 ○ 취임 후 인사이동을 빈번히 한 사유 ○ 외부에서 영입하여 수당을 받고 있는 과학문화연구소 전문위원 밑에서 내부 조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문제임 ○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수의계약 상한선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한국과학문화재단 회계내규는 수의계약 상한선을 5천만원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상위법 위반임 ○ 2002년이래 예산 및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원은 63명 그대로인데 정원 확충계획 필요(인원확충 계획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 요청) ○ 인원증원 보다는 사업에 대한 아웃소싱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여부 	
예산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상콘텐츠를 제작해야 할 사업비를 과학지식통합관리시스템(Science Knowledge Integrated System), 성과관리시스템(Balanced Score Card) 등 시스템 구축에 사용하는 등 예산전용 ○ 영상콘텐츠풀 구축 사업예산 중 24억원이 현재 까지 계약도 되지 않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음. 과학기술부는 분기별 예산 집행율을 철저히 관리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함 ○ 한국과학문화재단의 12월 지출내역 중 선급금 액수가 19억원임. 다음 해 사업에 대한 선 지급 건이 매우 많으며 연간 예산의 40%가 12월 29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일~31일 사이에 집행되었음. 또한, 12월 지출 내역 중 3천만원을 넘기는 지출 건들이 많으며, 중간·최종금이 같은 날, 같은 제목으로 지출되는 것이 대부분임. 기관장으로서 회계원칙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상콘텐츠폴 구축 사업예산이 프로그램 구축 외에 어떤 용도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역을 모르고 있는 등 예산의 운용을 적절히 하고 있지 못함 ○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함 	
기관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인지 여부 ○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서의 책무를 다 해주기 바람 ○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,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,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등 여러 곳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은 문제임 	

다. 기초기술연구회

1) 기초기술연구회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기관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차원에서 출연(연) 원장 연봉 인상 적극추진 필요 ○ 상임감사 업무추진비 집행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사용을 하도록 해야 하며, KIST 감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일부항목에 대해 시정조치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외부위원 2인을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팩스로 투표하는 것은 무기명 투표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대한 시정조치 필요 ○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 필요 ○ 연구회 공동행정실이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요하며, 각종 규정 등의 표준화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함 ○ 우수연구인력 유출을 막기 위하여 연구원들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대책마련 필요 ○ 연구기관이 기관고유업무와 상관없는 단기과제 수탁이 많은 것은 PBS제도의 문제점임. 미래형 중장기 과제 위주로 운영 필요 	
정책기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학연 협력연구나 외부인력 활용 미비에 따른 대안마련 필요 ○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성격상 핵융합연구센터와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부설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당한지 검토 필요 ○ 연구회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공동연구와 기술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연구회를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임 	

2)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연구장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장비 DB구축을 통해 출연(연)의 공동연구 장비 활용율을 높여야 할 것임. 또한 DB 구축 시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억원 이상 장비 중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58.3%나 해당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 필요 ○ 장비도입시 장비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, 도입 시급성과 장비금액 등 가중치를 잘못 부여하면 후순위 장비가 도입될 수 있으므로 평가지표에 대한 재점검 필요 ○ 기초원천기술 개발은 고가 초정밀장비 없이는 불가능하고 이를 제대로 확보하고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.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도입·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	
인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인원이 총인원의 50%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, 이런 상황에서는 기초과학의 안정적 지원이 어려움. 이에 대한 대책수립 필요 	
지역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리적으로 인접성이 떨어지고, 과학인프라가 열악한 제주도에는 지역 센터가 없음. IT, BT 중심의 잠재적 연구역량 가능성이 높은 제주도에 지역센터를 설치하여, 제주특별자치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- 과학기술부에서도 가능하면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 필요 	
연구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민간수탁 및 기술이전 성과가 매우 저조한데, 이는 연구와 지원업무에 대한 기관성격의 정체성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 필요 	

3) (부설)국가수리과학연구소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연구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소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 해외연구소와의 협력과 해외우수인력 확보 필요 ○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고등과학원과의 차별성에 대한 검토 필요 ○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대학이 아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설로 두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	
예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산 부족과 이에 따른 연구소의 효율적 운용 및 예산확보 방안 검토 필요 	

4) (부설)핵융합연구센터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정책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래 핵융합발전소 건설시장 주도를 위해 실증용 발전소(DEMO) 건설 기술력의 우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한국형 상용 핵융합로 개발계획 수립 필요 ○ KSTAR, ITER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인력활용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계획 수립 필요 	
KSTAR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KSTAR 장치의 조립, 운영을 위하여 KSTAR 건설현황 종합점검 및 장치운영계획 수립 필요 	
ITER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기 계획과 대규모 예산투자가 필요한 ITER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액의 확보 방안 필요 ○ ITER사업의 리스크 해소를 위한 예산 및 인력 투입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○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필요	
대외협력	○ 국가의 전략적 차원에서 핵융합에너지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·학·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필요	
기관발전	○ 기관설립과 핵융합에너지개발의 본격 추진에 따른 기관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마련하며, ITER 국내전담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독립법인화를 강구할 것	

라. 산업기술연구회

1) 산업기술연구회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기관운영	○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선임시 Fax로 투표결과를 접수하는 것은 규정 위반 ○ 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라 고유분야연구 전문화가 요구되며 이에 따른 예산 지원체제 개선 필요 ○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출연(연) 인력의 재교육 및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인 사이버연수원의 적극 추진 필요	
기관평가	○ 소관기관 평가 관련, 일률적인 평가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 평가방안 마련 필요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의 기관평가 제도는 단기적인 성과도출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고, 중장기 원천기술에 대해 소홀할 수 있기에 개선 필요 	
연구사업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탑브랜드 프로젝트 연구종료 시점이 대부분 2015년 정도임. 10년 후에도 계속 수행될 수 있는 사업인지 검토 필요 ○ 출연(연) 산업재산권 관리가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. 성과관리 DB 구축도 일부 기관만 전산화되어 있고 상호 호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방안 모색 필요 ○ 출연(연) 연구생산성이 낮으므로 미활용 기술에 대한 정리 필요. 아울러 연구 기획단계에서 상용화를 염두에 두고 연구과제 선정·추진필요 	

2) 한국기계연구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정책기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연(연)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(테크노 닥터 : 퇴직과학기술자를 활용한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 등) 필요 	
연구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근 발생한 자기부상열차 사고 관련, 인력수급 및 장비관리 개선방안 필요 ○ 도시형 자기부상열차가 상용화되면 최고시속 120km로 운영될 수 있는데, 도시 내에서는 구간이 짧아 경제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연구를 위한 연구보다는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04~'05년 승강기 안전검사 불합격 통보가 없는 이유가 승강기 검사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검토 필요. 한국기계연구원은 승강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안전검사업무보다는 품질이나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	
기관경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원(종사자)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 ○ 공동관리아파트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 ○ 현재 업무평가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 필요 ○ 업무보고에 실적뿐만이 아니라 투입비용도 함께 언급하여 투입대비 실적에 대한 연구원들의 주의환기 필요 	

3) 한국화학연구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기관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글로벌 신약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한국화학연구원은 신약 후보물질 도출을 위한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등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	
연구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근 북핵사태 등과 관련하여 화학무기도 위협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음. 화학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한국화학연구원이 화학무기 관련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 필요 	
연구장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화학연구원이 화학관련 산학연 지원 및 공동연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연구장비의 보수·교체 등 대책 필요 	

4) (부설)안전성평가연구소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기관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감염성폐기물 처리업무의 규정 준수 및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홍보·교육 필요 ○ 감염성폐기물 보관창고 소독이 내부적 규정에 따라 주 3회 실시되는지 여부 및 동일업체와의 지속적인 용역계약 체결 이유 ○ 기본사업 과제선정, 결과평가 적정성 여부 ○ 국내 안전·유해성 평가기준 및 시험기술의 국제적 수준 부합 여부 ○ 안전성평가 자료의 높은 선진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 필요 	

마. 공공기술연구회

1) 공공기술연구회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기관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기술분야에 적합한 인사의 임명을 위한 노력 필요 ○ 소관연구기관의 용역과제에 참여중인 이사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○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의 연구과제참여 및 직접경비 중 일부 집행 부적정 ○ 지적재산권의 유지관리비용이 수입을 초과하여 적자상태를 보이는 불합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. 개선할 수 있는 관련 평가지표 개발 또는 계획서 서면 제출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미활용기술이 많은 이유와 미활용기술 목록 제출 ○ 검사역 과건근무제의 시행취지 및 결과, 향후계획 ○ 여성과학자비율이 타 연구회에 비해 낮은 이유 ○ 소관연구기관 연구원의 사고발생시 규모가 크고, 실험중 사망·부상의 경우가 많은 이유 ○ PBS제도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 ○ 3개 연구회 통합에 대한 의견 	

2) 한국표준과학연구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연구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현 현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(연)의 역할 ○ 해외공동연구 실적 및 개방적인 연구환경 분위기 조성 	
연구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히 건수가 줄어드는 등 연구성과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능률성과급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 ○ 특히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대책 ○ 기술이전, 기술료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집중적인 연구 필요 ○ 2005, 2006년의 논문 평균 인용지수가 크게 감소한 이유 	
기관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여성과학기술인 고용비율이 낮으며, 여성인력 비율의 비정규직 편중 문제 ○ 2005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결과 ○ 첨단인증동 건설사업 계획 추진 현황 ○ 대덕특구내 공동관리 아파트의 노후화 상태 및 매각관련 향후 대책 	

3) 한국해양연구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<p>연구사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장비 노후화에 대한 대책 ○ 해양바이오 연구과제에 대한 실용화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연안바이오 관련 연구계획 ○ 주권 확보면에서 이어도해양종합과학기지 주변 해역에 대한 조사계획 필요 ○ 독도 연구사업은 경제·사회적 파급효과 이외의 가치가 있으므로 차질없는 연구수행 필요 ○ 차세대 심해 무인잠수정 선정과정 및 향후 활용계획 ○ 기관장 차원에서 대형위그선 실용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 ○ 대형위그선 개발의 사업성 및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	
<p>기관운영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감사의 임무 및 감사의 전문지식 결여문제 ○ 한국해양연구원의 부산이전에 따른 예산부족에 대한 대책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증진방안 ○ 해양관측자료 휴대폰서비스 관련사업을 중단한 사유 및 자체서비스 콘텐츠 개발 의향 ○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이유 ○ 여성과학자가 타 연구원에 비해 적은 이유 및 여성인력 수급 세부추진계획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○ 여성인력 채용목표 ○ 실험실 사고와 안전교육에 대한 상세한 계획 	

4) (부설)극지연구소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세종과학기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남극에 대한 기득권 확보계획 ○ 2040년 남극연구 선도국가 도약 가능 여부 ○ 경쟁국들의 남극기지 보유현황 ○ 세종과학기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첨단화 되어야 하는데, 현재의 상태 ○ 세종과학기지 보유 장비 중 노후화된 장비(500만원 이상 102개 장비 중 83개 품목 내구연한 초과)가 많은데 이 장비로 정상적인 연구가 가능한지 여부 ○ 외국의 경우 자체 예산을 모금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. 세종과학기지를 활용, 기업을 대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장비 및 기지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○ 남극세종과학기지 근무인원과 보수현황 ○ 세종과학기지 근무인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예외 적용을 위한 법률개정 보다는 다른 분야에서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	
쇄빙연구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여부 ○ 예산 확보 여부 	

5)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연구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원의 에너지연구사업 중 핵융합발전과의 연계성 ○ 에너지 위기, 석유 고갈에 대비한 유력 에너지 개발현황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·재생에너지의 적극적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효과의 극대화 필요 ○ 국내 석유의존도, 신재생에너지 이용율, 선진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율 및 예상되는 석유 고갈년도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○ 사업별 목표 기대치가 과대평가된 것에 대한 견해 ○ 폐기물관련 개발예산비율이 높은 반면 대체에너지 개발인 태양열, 풍력 개발예산비율이 적은 사유 ○ 연구과제 중 연구 중단, 변경(연구책임자 변경) 사유 ○ 민간과제수탁 비율(현 5% 수준) 제고 필요 ○ 원장 취임이후 연구프로젝트 참여과제문제 및 관련규정 위반 여부 ○ 원장이 참여한 연구프로젝트 회의비 중 원장이 1/3을 사용하고 이중 많은 부분을 해외여비로 사용한 이유 ○ 연간 연구비 약 2억원의 사업을 수행함에 소요되는 적정 인력수, 연구수행의 평균기간, 책임연구원이 급여수준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최소 과제수 ○ 과제 특성이 유사한 여러 연구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 	
기관운영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1C 에너지대란 발생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개발을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보강 계획 ○ 노후화된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예산 요구액이 '06년의 예산과 동일한 사유 ○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다양화와 적극적 참여 유도 방안 ○ 출연(연) 공동소유 APT 매각에 반대하고 있는 사유 ○ 공개입찰 건수가 단 1건이고, 26건의 수의계약 중 7건을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유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원장선임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기간 및 내용 ○ 원장 취임과정에서 재공모 및 선임과 관련된 문제 ○ 사이언스빌 추진위원장으로 인하여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유 ○ 현 원장의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및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자문위원 경력 여부 ○ 원장 선임 관련, 낙하산 인사의 해당 여부 ○ 원장으로 선출되는데 있어 정부로부터의 특혜 여부 	
업무보고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06년도 시행중인 각종 감사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 사유 ○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행복도시 시물레이션 구현 관련 문제 	

바. 한국수력원자력(주) 영광원자력본부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복수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울진 5,6호기 복수기 부식에 의한 방사선 누출로 원전운전이 중단된 사례 ○ 울진 5,6호기 복수기 부식 원인 및 안전대책 ○ 부식이 예상되는데도 제작을 추진한 이유 ○ 복수기관련, 확관이나 용접을 통해 발생된 문제에 대해 하나의 재질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한 견해 ○ 튜브시트를 분리 제작한 사례가 없어 안전성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음. ○ 복수기관련, ARC코팅 보증기간이 10년인데 10년마다 재시공 작업 수행하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문제가 있음.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수원은 뒤늦게야 고성능 세라믹 복합재료 임시코팅을 실시함. ○ SR50A제품 개발자의 교수부인이 계약직전 설립한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것에 대한 사실여부 ○ 신고리1,2호기부터 두 조각의 튜브 시트를 접합한 후 코팅하려는 계획 여부 ○ 신월성 1,2호기 복수기 제작사도 미국제품인 AL6XN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는지 여부 ○ 복수기 제작업체가 한수원이 고집하는 SR50A에 대해, 분쟁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는지 여부 ○ 복수기관련, 용접이 불가능해지자 "확관"을 실시해 회사 교재(教材)에 나온 내용과 다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○ 영광원전 복수기는 튜브재질을 사용하는지 여부 ○ 복수기 부식으로 인한 해수유입으로 원전이 정지되는 상황을 안전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여부 ○ 외국에서도 상단 30% 스테인레스 재질, 하단 70%는 티타늄 재질을 사용하는 2중 구조로 되었습니까? 한수원(주)는 복수기 튜브와 관판 피복재의 밀봉이 미흡하여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슈퍼스테인레스라는 재질을 사용한데서 기인한 재질선택의 문제인지 여부 	
공용디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외 전원상실 사고에 대비한 공용디젤발전기가 필요한데 대한 조치 ○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용 비상디젤발전기 운영 필요성 ○ 국내 원전의 비상디젤발전기 수가 포스마크 원전의 50% 수준인데, 고장이 나면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 ○ 포스마크 1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운전불능 사건과 유사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고장정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보다 향후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에 대한 입장 ○ 계획예방정비 직후에 고장이 잦은 이유 ○ KINS 지적사항 중 영광원전이 미결 건이 가장 많은 이유 ○ 국내 원전 사고 및 고장건수의 한수원과 KINS 제출 자료가 서로 다른데 이에 대한 견해 ○ '06년 원전 오조작 건수가 벌써 7건이고 '04년에는 자연열화에 의한 고장까지 발생,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점검 필요 ○ 현장에 화재방호전문가 보유 ○ 화재 전문 방호전문가 양성계획 ○ 자체 소방대 소방차 성능유지 위한 안전장구 관리강화 및 소방대원 훈련강화 방안 	
고리원전 1호기 계속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리원전 수명연장의 행정처리가 늦어져서 가동중지로 인한 손실액이 발생되지 않는지 여부 ○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인허가 불가시 대책 ○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 승인시와, 승인 불가시 각각의 대책 ○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신청지연 이유 ○ 고리 1호기 장기 발전정지 가능성 	
용역, 계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사선 안전관리 용역 등 발전소 용역업체의 저가낙찰에 대한 견해 ○ 소방용역업체의 등록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전주기적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의향 ○ 원전 소방용역 위법수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한데 대한 견해 ○ 미승인 하도급의 소방용역업체가 자격업체로 선정된 배경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자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조업체 폐업 및 생산중단에 따른 중요 부품 확보 대책 ○ 기존 EX2000(여자기)를 교체 또는 유지 여부 	
방사성폐기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전 사용후 연료를 습식저장조에서 건식저장고로 이동하기 위한 운반용기 확보에 대한 대책 	
폐 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자로 폐기비용 확보 방안 	
처분장과 본사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폐장부지 선정 후 부지 안전성 평가는 순서가 어긋난 것 아닌가? 또, 바다에 인접해 있고 활성단층과 불과 5Km 떨어져 있다. 지진 발생시 주변 오염 가능. 해수에 의한 콘크리트 해수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○ 경주 방폐장부지 확정 후 중저준위 폐기물 관리 계획은? 특히, 영광원전 발생 폐기물 운반 계획 ○ 방폐장 설립위치에 본사, 양성자 가속기, 직원 사택이 홍보자료에 함께 있는데, 실제 다르게 추진되고 있지 않는지 여부 ○ 본사 양성자가속기,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경주로 간다는 것이 합의된 내용인지 여부 ○ 본사 이전관련 근무자들의 처우 개선방안 ○ 본사 이전에 직원 75%가 반대한다는데 대한 견해 ○ 본사 이전시기가 2010년인데 차질 없는 추진 여부 	
보 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테러공격에 대한 대비 방안 ○ 원전 청원경찰의 역할, 인원, 연령 등 보안능력 ○ 자동동보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사항이나 대안 ○ 비상상황 대비 실질적인 소집훈련 방안 ○ 지난 3월 과기부가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동보시스템의 정상 작동여부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울진원전 골프장이 제한구역 내에 설치되어 보안설비 촬영 등 문제소지가 있는데 향후 처리 방향 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환 경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광해수 사용허가의 이달 말 만료에 대한 대책 ○ 매년 되풀이되는 해수사용 허가에 대해 영광군과의 공방을 잠재우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쳐 분쟁 소지를 없앨 의향 ○ 중국원전 지속건설에 따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○ 도암댐 유지비 집행내역 및 향후 처리방향 ○ 태양열 발전이 무늬만 신재생에너지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타 에너지에 비해 높는데 이에 대한 견해 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방 사 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광원전 지역주민의 갑상선암 역학조사 수행 기관 선정배경 등 ○ 원전 종사자와 비종사자의 암 발생률은 비슷하나 원전종사자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 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홍 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, 6월 한국갤럽 설문조사결과 영광본부가 타본부에 비해 호감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견해 ○ 지역에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○ 홍보관 추진 내역 	

2. 정보통신부소관

가. 정보통신부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<p>정책홍보 관리분야</p>	<p><위원회 운영> ○ 정보통신부 산하 위원회 중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 재검토 필요</p> <p><산하기관 운영> ○ 산하기관 임원 선임시 정치권 낙하산 인사 사례가 있었다는 데 대한 견해 ○ 산하기관간에 업무가 중복되고 연계 가능한 업무가 많으므로 기능조정 필요 ○ 산하기관의 국감 업무보고가 정확한 실적보다 기관 자랑 위주로 불성실함</p> <p><자체평가> ○ 진정한 자체평가를 원한다면 독립된 외부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</p> <p><신원조사 강화> ○ 신기술, 기업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해 향후 각급 산하기관 임직원 채용시 신원조사를 철저히 실시할 것</p>	
<p>감사분야</p>	<p><자체감사> ○ 중앙전파관리소 제주분소 신축과 관련해 입지조건 부적정, 부지선정 과정의 비리의혹 및 합리성 결여, 수방 대책 미비 등 ○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분이 많으므로 철저한 교육과 높은 징계수위를 통하여 음주사고 수치를 낮추도록 노력요망</p>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찰청 TETRA 사업 관련 기술기준 개정 회의자료 등의 은폐/과기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 실시 ○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창립 10주년 행사에서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고 그 예산집행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 ○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의 외유성 제주도 출장 등과 관련하여 원장의 자질이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 	
미래정보 전략분야	<p><인터넷광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정클릭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overture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 ○ 온라인광고시장이 신문광고 시장에 필적할 정도로 성장함에 따라 피해예방 방안 강구 <p><인터넷 주소자원 관리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터넷 주소자원 등록 수수료 인하 및 도메인 등록 대행사에 대한 불공정계약 개선대책 마련 <p><u-City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u-City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 성공적 사업 모델을 만든 후 확산시켜 나가는 단계적 전략 수립 필요 ○ u-City 추진 도시에 대한 현황이 없고 관리체계가 부실하며 대기업 사업수주가 많은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<p><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입주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예비인증제도 개선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<u-Health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u-Health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적·제도적·기술적 대책 마련 필요 <p><u-Payment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USIM칩에 금융카드 탑재에 대한 이동사와 금융사간 이견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강구 <p><전자정부통신망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통신망 관련 사업의 통폐합이나 상호연계방안 강구 	
통신서비스 정책분야	<p><통신기획정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부의 요금규제틀 등 새로운 경쟁법칙을 도입해야 될 시점으로 규제정책을 변경할 의향 ○ 통신부문 역무분류체계에 대한 로드맵 필요 ○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요금 인가를 폐지하고 가격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대한 검토 필요 <p><통신경쟁정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계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요금정책 필요 ○ 결합판매규제 완화 시 경쟁 보완장치 마련 필요 ○ 전기통신설비 제공, 가입자선로 공동활용,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등 공정경쟁정책에 대한 정책적 평가와 함께 결합판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'도매회선 임대제도'의 도입이 필요 ○ 결합판매와 관련한 고시에 QoS, SLA 등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 ○ 인터넷전화(VoIP) 서비스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<통신이용제도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CID서비스 매출액 현황 및 무료화 정책방향 ○ SMS서비스의 요금 적정성 검토 필요 ○ 정부주도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 추진의 적정성 여부 ○ 멤버십제도 운영현황 및 이용자 이익 제고방안 강구 ○ 3G 서비스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개방과 가입자 인증모듈의 도입이 필요 ○ 단말기 보조금 지급 현황 및 규제폐지에 대한 준비 필요 ○ 로밍폰 요금 기준이 없으며 이동통신사간에도 차이가 많은데, 이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○ 이통사의 음성전송방식 변경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거나, 이를 비교·검토한 결과를 제출 ○ 이통사 다단계 재판매로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법령정비, 공정거래위원회 연계 등 대책마련 필요 ○ 통신사 귀책사유로 인한 통신신용 불량자 보호 대책 필요 ○ 폐 휴대폰 수거 및 재활용 방안 마련 필요 ○ LGT의 IMT-2000 허가취소정책 점검 및 EVDO rA 서비스 도입시 소비자 편익 등 고려 필요 ○ LGT의 IMT-2000 사업개시 시기 및 허가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가 법적절차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까지 무시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변경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정책의 오류에 해당 ○ 이동전화 책자 전화번호부 발간정책 재고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<통신자원정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신사의 긴급통신수단 확보에 대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○ 법원의 감청 영장 발부건수와 통신사업자의 협조 건수에 차이가 있어 불법도청에 대한 의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<p><융합전략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합위원회안은 산업진흥 기능이 미흡하므로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할 수 있는 별도의 보완책 필요 ○ 방송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산업활성화 정책을 수행하기 바람 ○ IPTV 등 융합서비스 추진방향 및 계획 ○ 통합규제기구 설치법안의 주요 내용 ○ 네트워크와 서비스 영역을 분류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, 거대기업의 탄생에 대한 대책 ○ 방송융합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적극적, 제도적으로 되어야 수익모델이 나오고 먹거리가 됨. 그것을 좀 더 집중해서 걸치레보다는 내실있게 준비 ○ 통방융합에 있어서 정보통신부가 앞장서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 ○ 통방융합에 필요한 재원 마련 검토 	
정보통신 정책분야	<p><정보통신 정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IT839 정책은 고용 파급효과가 미미하며 정확한 지표나 성과측정 방법이 부재함 ○ IT839 전략이 기술중심이 아닌 시장중심의 정책 추진과, 정부·기업 역할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새로운 발전방안 제시(연2회 시장상황 동향 조사 실시) ○ IT 부문 생산증대가 다른 부문에서 생산증대나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대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면서 최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내수 경기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('06.2월 IT839 전략 보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IT839 정책을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<p><IT중소벤처기업육성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전시스택의 사업화 현황을 매 분기별로 공개 및 국회에 보고하고 자체감사를 통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음 ○ 중소기업 지원은 국가의 업무이며, 지자체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센터운영이 가능한지, 충분한 중소기업의 수요가 있을 것인지, 타지역 중소기업은 같은 요금으로 이용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<p><IT산업 정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IT부품·소재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계획 및 육성방안 필요 ○ 4G 이동통신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삼성전자는 TDD 방식, ETRI는 FDD 방식으로 기술개발 중인데 R&D예산이 충분치 않은 우리나라 여건상 선택하여 집중하는 것이 필요 ○ HSDPA 휴대폰의 정확한 불량률 수거율 자료를 제출하고 향후 HSDPA 단말기의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불량률의 주기적 조사 필요(불량률 조사 보고) ○ 휴대폰 SW A/S 관련 SW업그레이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발생해도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A/S를 받아야 하는 소비자들로서는 불편하므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○ 국민들이 핸드폰을 싸게 살 수 있는 대책을 강구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<정보통신 기술정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ETRI가 민간기업이 해야 할 과제를 연구함으로써 연구원의 사기 및 사기업의 연구소 역할을 하는 문제 ○ 중장기적으로 ETRI가 정보통신산업기술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판단하여 추진 ○ ETRI가 민간업체의 상업적 기술에 지나치게 참여하는 것은 WTO 체제하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허·기술 보유에 있어 민간과 정부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○ ETRI가 보유한 특허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므로 향후 관리방안을 보고 ○ 발전 속도가 빠른 IT분야의 지적재산권은 별도 관리가 요구되며 정보통신 특허에 특화된 기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 ○ 부품산업 및 첨단기술에 대한 R&D투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음 ○ 5년전부터 계속 지적재산권 관리청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적하였는데, 이제는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지적재산권관리청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는 등 정부 대책이 필요 ○ 정부는 R&D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있으나, 기술력 격차로 인한 로얄티 지출은 기술무역수지를 악화시켜 산업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데, 기술격차의 주 원인을 파악하고 기술격차 극복 대책이 필요 ○ IITA 전문위원(PM) 확대 및 성과평가기준 재검토 필요 ○ PM이 인력부족으로 장기공석이 많고 전혀 다른 분야의 PM과 겸임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PM 제도에 대한 별도 대책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○ 한미 FTA(자유무역협정) 통신·전자상거래 분과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 정부에 기술의 중립성(정부 개입 불허)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한미 FTA 협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의 유연성이 요구됨.</p> <p><IT인력양성></p> <p>○ ICU와 KAIST 두 대학 통합을 추진하게 될 경우 ICU 설립취지와 특성을 유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 필요</p> <p>○ ICU·KAIST 통합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IT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ICU가 독립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강구</p> <p>○ 교수 IT 해외연수사업 관련 연수 기간중 국내에 체류하는 사례가 있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</p> <p>○ IT해외교수초빙 지원사업에서 초빙교수의 강의 시간은 3시간에 불과하고, 100% 박사인력이 아닌 경우도 다수 있는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외국교수를 초빙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</p> <p>○ ICU 운영 현황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하여 보고할 것</p> <p>○ 고급인력양성에 '05년 482억원, '06년 480억원 등 많은 투자를 하였음에도 고급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투자대비 효과가 없음</p> <p>○ 내년도에 IT인력 부족현상이 집중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</p> <p><지식정보 산업></p> <p>○ 모바일 필드테스트베드(MFT)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추진체계상의 지자체 역할을 정립할 것</p>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u-IT클러스터(USN Fab) 구축 관련 인천유치 사유, 사업타당성, 중복가능성, 수행주체(정부여부), 생산시설 여부 등의 문제가 있는바, 과기장관회의나 나노산업발전위원회 등에서 객관적 논의를 거쳐 수정할 사항은 수정하고 국회의 검토를 거치는 등 충분한 타당성 검토 필요 ○ USN Fab과 여타 나노 인프라 시설간의 중복성과 연계 방안에 대해 “나노기술조정위원회”에서 심의 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참조·반영 ○ USN Fab 시설에 중복 등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을 잠시 보류하고 나노 Fab의 8인치 웨이퍼를 사용하고 난 후 재검토 필요 	
국제협력분야	<p><국제협력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 IT 기업의 세계진출을 위한 지원 정책은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을 위해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이 요망됨 ○ 장민호 채용경위, 담당업무, 활동상황, 인적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부의 자체 현황파악이 필요하며, 향후 산하기관 채용시보다 신중을 기하여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요망 	
전파방송분야	<p><CATV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케이블TV 기술표준은 방송법의 위임범위 안에서 정해야 하며, 나머지는 권고표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○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분리형, 일체형을 결정하게 함이 바람직 ○ 셋탑박스 시장에서 중소기업체가 안정적으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<전자파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휴대폰 전자파의 인체영향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필요 ○ 전자파 유행성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이동통신 사업자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필요 <p><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 통관절차 개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자파적합등록 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불법기기의 유통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통관절차를 '선인증후통관'으로 개선할 필요 <p><경찰청 TETRA 시스템 도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파연구소에서 인증해 준 단말기의 국제 TETRA 규격 일치 여부에 대한 공개 측정시험과 경찰청 TETRA 시스템과 전국 도시철도 TETRA 시스템의 상호 호환성 시험 및 해당 사업 제안서가 요구하는 기능 충족여부에 대한 공개 측정시험 실시할 것 <p><군입대자 전파사용료 감면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군입대 장병들에게 전파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함 <p><TPMS 주파수 분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TPMS 주파수 분배시 아마추어무선이 TPMS 통신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분배한 이유 ○ TPMS의 국내개발을 산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부는 자국시장을 다 내주는 정책을 펴고 있어 정부부처간 정책조율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 ○ TPMS 분배시 외국 자동차 업체에게 특혜를 주어 통상협상에서 국내산업 보호의지가 없다고 판단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무선설비규칙인 주파수 허용편차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은 특정의도로 결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 <p><기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앙전파관리소 제주분소는 부지를 잘못 선정하여 공사비가 증가하고 태풍피해를 입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감사 필요 ○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전파차단 여부 및 대통령 경호실법 보완 협의·추진 필요 ○ 주파수 공유 기술을 개발하여 효율성이 높은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케 하는 방안 강구 	
정보보호분야	<p><개인정보보호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보안서버보급 방안 마련할 필요 ○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불법 위치조회에 대한 보안 대책 강구 ○ 포털사이트에 신고접수방법, 피해구제 가이드라인, 공동운영 포털피해구제신고센터 등 포털사이트 피해구제 대책 마련 필요 <p><정보윤리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친북게시물 삭제관련 현행법으로 할 수 방안을 강구·조치하고, 차단하고 있는 해외 친북사이트가 접속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 필요 ○ 친북게시물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장관명령 대상을 비영리 부문과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,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시킬 필요 ○ 인터넷의 유해정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원 등 보강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휴대폰의 모바일 콘텐츠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제공관련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리감독 및 차단사이트 안내방법 개선 등 사후관리가 필요 ○ 인터넷상 개인정보침해 등 정보화역기능에 대한 기반마련 및 대응방안을 강구 	
SW분야	<p><SW진흥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05, '06년 GS인증 우선구매제도의 적용업체가 4개업체에 집중되고, KIPA검토 및 정보통신부 결재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○ 공공SW기반 인터넷 बैं킹사업은 보안이 생명이므로 관련대책을 수립 	

나. 우정사업본부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우정사업분야	<p><경영기획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방 융합기구 출범과 별개로 우정사업본부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경영 효율, 직원 사기 진작 문제 등을 해결할 것 ○ 정부 발주 사업 중 '협상에 의한 계약', '최저가 입찰', '수의계약' 현황과 낙찰잔액 현황과 사용처는 어디이며, 저가입찰로 인한 사업 부실화 우려에 대한 대책 ○ 인천부평, 대구강북, 남양주, 수원우체국 공사를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하였으나,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25조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면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,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의 발주공사가 분리발주 예외범위로 포함되기 전까지는 우체국 등 청사의 발주시 턴키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지양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<우편분야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폭증하는 수도권 소포우편물에 대한 처리시설이 포화상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대책 ○ 용산역 인근 철도공사 부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서울우편집중국의 현재 상황과 서울우편집중국 이전을 위한 부지 확보 방안 <p><금융분야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체국보험 개방에 대한 진척상황 및 우리의 입장과 우체국보험을 정부가 지렛대로 사용하여 포기하지 않을지 여부 ○ 우정사업본부는 청이 되고, 궁극적으로 민영화로 일각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, 그러면 한미 FTA가 진행중에 있는 우체국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○ 우정사업본부 금융서비스 TV뱅킹 사용률이 저조하며, Mobile Banking 역시 자체전망 없이 도입되었으므로 체계적인 계획 수립 필요 	

다. 전남체신청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정보통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어민들을 위한 무선국 관리 등에 대한 대책 ○ 전남지역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추진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정보화교육 필요 ○ 주민들이 정보화기기를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○ 교육실적보다는 내실 있는 정보화교육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보화교육 강사진 구성 시 여성인력이나 청년 실업 인력 활용 ○ 도서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이 미진한 데 대한 대책 ○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는 건물을 확대할 방안 강구 ○ 기술기준 적합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과도한 사유 ○ 전자파 유해성 판별에 수치 1의 기준 합당 여부 ○ 사랑의 PC보급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계획 ○ 전남지역 정보격차 해소대책 	
경영기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6급 이하 공무원 충원을 체신청장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필요 ○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○ 여성공무원 중 5급 이상이 1명뿐인데 이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 ○ 특수지 위탁집배원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 ○ 우정사업본부 유휴재산 관리 방안 	
경영기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파사용료 과오납이 많은 이유와 소액 환급이 저조한 이유 ○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고용률이 낮은 이유와 대책 ○ 서광주우체국이 서구, 남구를 관할하고 있으므로 남구에 남광주우체국 신설 필요 ○ 행정정보공개 활성화 방안 ○ 사회공헌활동 확대 방안 ○ 전남체신청 업무현황 주요업무에 “신명나는 활기찬 직장 만들기”는 포함 불필요 	
우편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섬이 많은 전남청의 소포 익일 배달률이 높은 이유 ○ 전남지역의 우편물 배달사고, 분실, 파손, 훼손이 많으니 이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반송우편물의 유형과 원인 및 반송률 감소대책 ○ 우체국택배, EMS 오배달 원인 ○ EMS, 등기소포 성장을 위한 대책 ○ 도서지역에 대한 우체국택배서비스 방안 ○ 우편물도착통지서에 문의전화 가능시간을 기재하는 방안 제시 ○ 창구부문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	
금융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금, 보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목표를 할당하고 있는지 여부 ○ 고객상담실, 365자동화코너 설치 확대 등 금융사업 경쟁력 강화 필요 	
감사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05년 전남체신청의 비위 적발건수가 급증한 주요 요인 	

라. 한국정보사회진흥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정보화기획 및 정책	<p><정보화지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IT가 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한 부문을 측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새로운 지표 개발 필요 <p><법·제도개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에 장애가 되는 법률·규제를 개선하여야 함 	
u-인프라구축 지원	<p><BcN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업체간의 분쟁도 막고 소비자의 피해도 막을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의 품질보증제도 강구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<IPv6> ○ IPv6로의 전환 활성화가 지연되는 이유 및 대책을 강구하고 IPv6 도입 활성화 유도</p> <p><농어촌초고속인터넷> ○ 단방향 위성인터넷은 품질이 열악하여 양방향 위성방식을 택해 고품질의 인터넷 제공 필요</p> <p><u-Health> ○ u-Health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대응전략 강구 ○ 개인 의료정보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 강구</p> <p><건물인증> ○ 홈네트워크 인증제의 경우 무선관련 기술 미비 및 객관적 심사기준 미비에 대한 시정대책 마련 필요 ○ 건설교통부의 인텔리전트빌딩 인증제, 정보통신부의 초고속망건물·홈네트워크 인증제와 중복 등에 대한 대책 강구 ○ 초고속망 인증서비스와 디지털홈 인증서비스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필요</p>	
u-서비스지원	<p><인터넷 광고> ○ 인터넷 광고에 대한 이용자 보호 대책 방안 강구</p> <p><IT중소기업지원> ○ IT중소벤처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에 대한 심층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정책의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 조정방안 강구</p>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<RFID/USN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 요일제 RFID 사업 등 타기관에서 RFID 관련 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구 및 제도적 보완방안 강구 필요 ○ RFID 운영부서에 장기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전자파 유해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강구 필요 	
IT성과평가	<p><정보화사업평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보화사업의 시너지효과 및 투자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평가기능 수행과 평가능력 향상방안 강구 <p><ITA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ITA전담기관으로서 ITA전담인력 등 제반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 및 기술지원 시행 	
조직운영	<p><조직운영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원 징계경감의 기준 검토 	

마. 정보통신연구진흥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R&D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국의 IT분야 급성장에 따른 우리나라와의 기술격차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 ○ 국제공동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국내 R&D센터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관리대책 필요 ○ 융자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대출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어떤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회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 ○ 출연사업이 상대적으로 용자사업에 비해 선정이 어려운데 용자를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 출연사업으로 지원하는 문제 ○ DMB가 활성화될 경우 유럽의 지재권 주장시 주어야 할 것과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와 WiBro 지재권의 경우 정부 보유분과 삼성전자 보유분 검토 ○ IT지재권센터의 지재권분쟁에 대한 현황과약 필요 	
IT83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IT839전략은 공급위주의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, 중소기업-대기업간 협업체계 강화, 정부-민간 역할 재정립 및 협력 강화 필요 ○ 1명의 PM이 몇 개 분야를 겸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경쟁력 제고 및 PM의 역할 등을 감안 할때 향후 PM의 수를 상당수 늘려야 할 필요 ○ 연도 중 퇴직한 PM에 대하여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등 성과급 지급체계에 대한 문제 ○ 실적이 저조한 PM이 여러분야를 겸직하는 PM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성과평가 기준 재검토 필요 ○ PM 겸임과 관련 목표지향적 과제관리 및 가시적 기술개발을 위해 한 분야에 전념할 필요 ○ 분야별로 PM간에 투명하고 일관된 성과비교 필요 ○ 이직한 PM들의 관련 과제 참여와 관련하여 연구기관 선정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필요 	
중소벤처 기업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및 산업경쟁력강화사업의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비율이 미흡한 이유 ○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및 산업경쟁력강화사업의 상용화 부진 및 기술료 징수실적 저조 이유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및 산업경쟁력강화사업의 파급효과 측면에서 연도별 신규고용수가 감소하고 있는 바, 신기술개발지원에 있어 고용부문에 대한 고려도 감안할 필요 ○ 산업경쟁력강화사업 중 불량·사고과제가 경영악화로 인한 휴·폐업이 대부분인데, 해당기업의 재무구조 등을 과제선정전 검토 여부 ○ IT산업경쟁력강화사업에 과제관리전문가(PS)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 이유 	
평가사후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정산잔액 10.5억원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○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선정시 정부출연기관을 일반기업보다 철저히 관리하고, 연구중단 및 탈락되는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 ○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중단 주된 이유 ○ 우전시스텍 지원에 있어 일본 수출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 ○ 정산환수금 환수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○ 우전시스텍에 대한 분기별 사업화 추진현황 보고 ○ 우전시스텍 지원에 있어 사업의 적정성, 지원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체점검(감사)를 실시하여 그 결과 보고 ○ 기술료 징수와 관련 이스라엘의 pay-back시스템과 같은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좀 더 뚜렷한 정책적 대안 제시 필요 ○ 특허기술을 기업에 이전 상용화하여 중소·벤처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과구조인데 분석결과 그러하지 못함. 사업지원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술이전 성과지표로 기술 발굴건수와 기술이전 성공율 등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 방안 강구 ○ 개발기술을 사업화·실용화 하기 위해 정부에서 휴면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을 논의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음. 휴면특허 이전 활성화 방안 ○ IT산업경쟁력강화사업의 지원과제당 논문 및 특허출원 성과가 높지 않아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동 사업에 대한 관리대책 	
인력양성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대학의 IT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학교육 인증 확대 필요 ○ 외국인 유학생 유치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 ○ 외국인 유학생 중 상위 3개국 전체의 2/3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국가 편중이 심하여 이에 대한 개선 대책 ○ ITRC지원사업 관련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필요 ○ ITRC지원사업으로 양성된 고급인력에 대해 사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DB구축 필요 ○ 해외초빙교수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100% 박사인력이 아닌 것 같으며 실무경력자도 다수 있는 것 같음.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외국교수를 초빙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○ ITRC(대학IT연구센터) 지원사업 관련, 선정된 연구센터가 탈락되고 있는 사유 ○ ITRC지원사업과 유사사업인 과학기술부의 과학/공학연구센터(SRC/ERC)육성사업과 비교할 때, 성과창출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데, 이에 대한 개선책 ○ 내년도에 인력부족이 집중되는 이유와 대책 ○ 국비 유학생의 국내 복귀 대책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급인력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○ 우수인력 해외유출 방지대책 	
기금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보통신진흥기금 고갈 위기 해결을 위해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용자사업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 ○ 통신사업자 출연금을 주 재원으로 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 고갈에 대한 대책 ○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구체적인 기금확충 방안 ○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사업을 조정할 필요 	

바. 한국정보문화진흥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정보격차해소 환경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화, 드라마 등 기존 콘텐츠에 대한 장애 유형별 접근성 제고 대책 필요 ○ 고가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보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 ○ 사행성 도박 압류 PC 활용 요청에 대한 추진현황 ○ 사행성 도박 압류 PC의 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 활용방안 및 향후 관계부처 협의 계획 ○ 보조기기 수혜자의 지역 편중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 ○ 정보통신보조기기에 대한 장애인의 A/S편의성을 제고하고, 동일 유형 제품에 대한 A/S기간의 통일 필요 ○ 보이스아이 마크제작 등 보조기기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향후 계획 ○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보급률과 지원건수 확대 대책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06년 보급대상에서 점자단말기가 제외된 사유는 무엇이며, 신청자 대상 선호제품 조사를 통해 보급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 ○ 수요가 높은 보급품목과 국내 기술의 저렴한 보조기기 보급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기기 개발지원이 필요 ○ 보조기기의 본인 부담금의 납입기간을 늘려주고 무이자 분할 납부를 실시하는 등 수혜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국민정보화 교육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문해자정보화교육에 대한 지속적 관심 필요 ○ 고령층 정보화교육 관련 60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필요 ○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확대에 따른 도서·농어촌 지역 정보화교육 확대 필요 ○ 새터민 정보화교육에 대한 교육시간 확대 필요 ○ 새터민 정보화교육 사업의 애로사항, 해결방안, 지원 대책 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보화 역기능예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터넷중독 예방 상담 인력의 지역별 양성 등 전문인력 확대 방안 마련 ○ 노인, 주부 모니터 요원 활용을 통한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일자리 창출 필요 ○ 공공기관 등 각종 홈페이지에 네티즌의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공익광고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, 제도적 방안 마련 ○ 인터넷중독 상담센터 인력 및 예산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○ 상담센터의 청소년 대상 상담 시간 확대 필요 ○ 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의 중요성을 고려한 향후 확대 방안 마련 ○ 보호관찰소 대상 교화 사업의 예산 확대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어린이들의 인터넷 이용률 확대에 따른 정부차원의 인터넷중독 예방 대책 필요 ○ 청소년 인터넷중독예방을 위한 교과서 활용률을 제고하고,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 활용 방안 강구 ○ 군장병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상담사 양성 및 각급 부대 배치에 만전을 기할 것 ○ 군장병 인터넷중독 진단척도 개발의 경과 및 주요 내용 	
<p>국제정보격차해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보격차해소사업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확대 방안 강구 ○ 해외IT전문가초청연수 수료생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○ 개도국정보접근센터의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○ 해외 정보격차해소사업의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하고, 계량화된 사업성과 분석 방안 마련 ○ KOICA 사업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정책 마련 필요 ○ 단기연수 위주인 해외IT전문가 초청연수의 국제정보격차해소 기여 정도 ○ 해외IT전문가 초청연수의 매칭펀드 방식 도입 방안 ○ 원격교육 등 해외IT전문가초청연수의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 ○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의 성과 측정 기법과 측정 지표 ○ KOICA사업과의 차별화된 수행 필요 ○ 개도국정보접근센터의 효과 산출 현황 ○ 해외IT전문가 초청연수의 실제적 효과 제고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지식정보 자원관리	○ 지식정보자원 DB구축과제를 활용성 위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의 개선 필요	
기관운영	○ 직원 대비 비정규 여성직원 비율 개선 필요	

사.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SW산업육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SW진흥원의 위상 및 SW산업에서의 역할에 회의적이며 SW 산업발전방안 ○ SW개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줄이는 노력 필요 ○ 수요자 중심의 시장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 필요 ○ 인도에 비해 국내 SW산업이 발전 못하는 이유 ○ 공공부문 SW구매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방안 ○ SW, 특히 패키지 분야의 수출이 초라함. 10대 패키지 SW기업에 등록을 기대함 ○ SW산업 육성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함. 신입원장으로서의 구상 ○ 하도급 문제를 비롯해 중소기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필요 ○ SW산업 국제 경쟁력이 낮은 원인 ○ '06년 임의수거 방식의 BMT에서 외산SW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 ○ '04~'06년 예산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'06년에 BMT 대상 제품이 1건 밖에 없는 이유 ○ 내년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데 BMT 방식 변화에 대해 향후 보고 바람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SW관련 통계작업의 일관성이 없음 ○ SW산업구조에 문제와 국내 IT 산업에서 제조업 위주의 불균형적인 구조에 대한 방안 ○ IT산업의 양극화에 대한 방안 ○ 기업이 잘되는 방향으로 획기적인 방안과 정책을 마련하여 SW진흥을 해주기 바람 	
<p>공개SW 활성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개SW는 SW산업에서 중요하나 지난 3년간 정책이 부실, 실적 저조함 ○ 정보통신부가 공개SW를 외면하는 현상황을 각성 ○ 일반 사용층 확산을 통한 공개SW 활성화를 위한 진흥원의 방안 ○ SW로열티 지급이 높은 실정. 공개SW가 대안으로 생각되는데, 리눅스 데스크톱 교육 등 공개 SW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필요 ○ 공개된 국제표준인 ODF의 도입 및 활용 검토 	
<p>SW전문인력 양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베디드SW 산업의 중요성 강조 및 전문인력 양성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 ○ SW인력은 충분한가 ○ SW분야는 젊은이들에게 인기도 없고 보수도 낮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○ IT업계 종사자 정책지원 방법 	
<p>DC경쟁력 강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DC산업활성화를 위한 DC거래인증 제도 시행을 서둘러야하지 않나 ○ DC산업 중복 근본적 해결방안 ○ IPTV 서비스의 성공을 위한 디지털콘텐츠와 SW의 역할 ○ 누리꿈스퀘어 지연에 따른 야간작업 등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○ 뒤늦은 마케팅마스터플랜 등 주먹구구식 운영과 상암동 DMC의 이미지 확립 요망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첨단 IT복합단지조성사업이 평가결과 성과점수가 낮은 등 부실함 ○ 누리꿈스퀘어의 분양수익을 제외한 차입금 규모와 관리시스템 보유여부 ○ 입주희망서 제출 기업중 글로벌 IT기업의 R&D 센터가 부재되어 있는데 활성화 방안 	
수출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iPark가 통합되기 전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직 및 업무조정 계획 ○ 국내 SW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 마련 ○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수출지역에 거점 확보되어 있는지 ○ 시장별·분야별 수출지원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지 	
기관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모과정에서 전임원장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, 관련내용을 공개안한 이유 ○ 1, 2차 추천위가 동일하고, 속기록도 없는 등 밀실인사가 아닌지 ○ 공모과정에서 과다 비용지출(특급호텔, 거마비 등) ○ 원장이 민간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유 ○ 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, 해결방안 ○ 해암빌딩 예산 미확보하고 2차로 118평(474백만원)을 임차하여 추후에 임차료로 지불하기로 계약한 것이 타당한 조치인지 ○ 진흥원 비정규직 비율 높은 것에 대한 대안 ○ 장애인 고용 실적이 낮음 ○ 산하기관 평가에서 SW진흥원의 평가결과가 하락한 주된 원인 	

아. 한국정보보호진흥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<p>인터넷 침해사고 대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피싱의 지속적인 증가 및 다양화에 따라 휴면 홈페이지 추가정리,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, 홍보 등 방지대책을 마련 ○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 중 악성코드를 유포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에 대해 정리할 것 ○ 중국 해커에 의한 게임아이템 등 국부가 유출됨에 따라, 대안을 만들어 정보통신부, 문화관광부 등에 대책마련 촉구 필요 ○ 공공기관 해킹피해 현황 및 관련 정보의 NCSC 업무협조 관계 여부 	
<p>불법스팸 대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휴대폰 문자발송량을 1,000통으로 한정된 것이 과도한 규제인지 검토 필요 ○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미납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관리 필요 ○ 신규스팸에 대한 과감한 차단노력이 필요 ○ 과태료부과 이후 재범사례 분석을 통한 과태료 수준의 적정성 검토 및 경찰이관 이후 추적관리 필요 ○ 외국발 스팸에 대한 대책 및 노력과 성과 	
<p>개인정보 보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포털업체 파산시 개인정보유출시도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사후대책 보고 ○ P2P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문제에 대한 시정조치 및 사후대책 보고 ○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새로운 대안 제시 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○ 중고컴퓨터에 내장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태 점검 및 대책 ○ M-OTP를 개발하여 게임업체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안 검토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사이버머니 현금거래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사이버머니의 현금화 단절을 위한 대안 필요 ○주민번호 대체수단 발급에 명의도용 휴대폰이 사용되므로 신원확인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 ○카드번호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○구글관련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하여 노출이 되지 않으나, 링크파일 등 자료에 포함된 개인 정보는 여전히 노출되어 있어 삭제 필요 ○“노출된 내 개인정보를 찾아라” 및 “개인정보 온라인 이용내역 무료조회 서비스” 시행에 대한 효과 ○보안서버 구축 및 확산 이외에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 ○구글 DB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구글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웹 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실시간 삭제가능 여부 및 대책 ○구글 외 다른 검색엔진 DB에 저장된 주민번호의 노출실태 파악여부 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인인증서 관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를 주민번호 대체수단 발급에 활용할 수 있는지, 있다면 어떤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야 하는지 ○금융결제원 증계서비스에서 이해당사자간 계약사항이 무엇이며 이 서비스가 위법인지 여부 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보보호 안전진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네이트 메일 서비스의 일시중단에 대해 정통방법 제46조의3과 제45조에 관련하여 법 적용 여부 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보보호제품 평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CCRA가입에 따른 정보보호 제품 평가 수요급증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○정보보호제품 평가대기 및 평가기간이 증가함에 따라, 평가적체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할 것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정보보호 수준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선기업들이 정보보호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홍보와 예산지원 필요 ○ 기업의 보안인력 요구수준을 파악하고,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책과 정보보호인력 및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필요 ○ 보안전담조직 설치를 홍보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현황 ○ CPO(개인정보보호 책임자), CSO(최고 정보보호 책임자)를 임명하고 있는 사업체 현황 및 CSO를 임명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분석결과와 CSO 임명이 저조한 원인 ○ 교육프로그램 중 CSO 양성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 존재 유무 및 향후 계획 	
정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 홈페이지 수에 대해 기관별로 통계가 다른 이유와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○ 보안서버 지표에 대한 정보통신부와 보호진흥원의 입장 차이 및 정책목표의 성과주의 여부 ○ 국가 정보보호수준 평가지수가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와 이 지수에 따른 한국의 수준은 ○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터넷진흥원과 정책분야 제휴에 대한 견해 	
경영일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획예산처의 '06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중 “정보보호체계강화”사업의 평가점수가 저조한 원인과 대책 ○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1건도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, 이에 대한 의견 ○ '05년도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채용실적이 없는 이유 ○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 윤리경영과 정보보호제품의 신뢰성 부문이 저조하게 나타났는데,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 	

자. 한국인터넷진흥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IP주소	○ IPv4주소 고갈에 대비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성화 방안 마련	
도메인	○ 도메인 등록대행사와의 재계약시 절차의 적정성 검토 ○ 등록대행업체가 진흥원에 도메인 등록비 납부시 발생하는 PG수수료는 도메인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 비용을 전액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	
인터넷 진흥	○ 인터넷사회 진흥을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노력과 향후계획	
인터넷주소 분쟁	○ 한국과 외국의 인터넷주소분쟁에 있어 한국의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, 패소의 주된 요인인 언어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영어매뉴얼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 필요	
모바일주소 (WINC)	○ WINC 주소가 실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모바일 검색포털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	
인터넷 거버넌스	○ ICANN 임원 이사회에 한국임원이 한명도 없어 국제 인터넷 주소관련 정책수립에 있어 발언권 약화	

차. 한국전파진흥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무선국 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무선국 검사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정보통신부 감사시 불합격무선국 통보가 결행된 점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지 여부 ○ 무선국 검사와 정보격차와의 연관성 여부 및 타 기관에서 국제정보격차해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검사 업무 수행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○ 동일한 불합격 사유가 해마다 증가하는 사유와 이에 따라 감사원 1인당 검사국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동일 사유로 인한 불합격률 감소 대책 마련 필요 	
인력양성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ICT전문인력양성사업의 예산집행은 5%로 저조한데 예산의 과다성립 여부 질의 ○ IT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불균형에 대한 조정 필요성 여부 	
전파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파수 초과수요가 국내외적 당면과제로 부각되므로 우리나라도 시장원리 도입이 필요하며, 이에 따른 법령 정비 필요 ○ 주파수 회수 재배치와 관련하여 미국의 클리어링 하우스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 	
경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전파진흥원은 수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,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구상중인 사업 ○ 수익구조 개선계획이 비용절감 측면에 집중되고 있으며, '07~'10년 사옥매각을 통한 수지 개선을 계획 중인데, 사업성과에 따른 수익구조 개선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닌지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무제표 산출시 순수 사업만으로 경영성과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○ 올해 중장기 전파방송정책 연구 지원 기능 및 국제적 활동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는데, 달성 계획 및 연구개발 기능 수행 조직 구축 여부 ○ 한국전파진흥원은 세계수준과 본원의 수준을 비교 분석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국제적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여부 ○ 정보통신부의 기능조정 추진결과에 따라 한국전파진흥원의 무선국 검사 비중을 점진 축소예정이나, 진흥원이 무선국 검사 강화를 통해 수지개선을 꾀하고 있는 계획과의 상충 여부 ○ 한국전파진흥원의 사업전략을 보면 '적극적인 전파진흥 사업수행을 통한 사업의 다각화'로 요약할 수 있는데 사업전략과 비전이 연계되는지 여부 ○ 원장은 한국전파진흥원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향을 잘 파악하여 기관 운영 바람 ○ 인문계 출신 원장 선임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 질의 ○ 한국전파진흥원의 사업내역에 대해 질의 ○ 진흥원에는 정보통신교육원이 부설기관으로 있는데 이런 부설기관이 향후 독립기관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정보통신교육원 인수에 대한 의견 ○ 한국전파진흥원 출범으로 인한 수입 예산 감소 추세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	
<p>MFT사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MFT 사업의 내년 예산은 66.7%가 삭감했는데, 사업목적과 내용 및 기대효과 등에 변화가 없는지 여부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MFT 조성규모(반경1.5~2Km)로는 제대로 된 테스트 구현이 불가능 하다고 보이는데, 외국의 사례 질의 ○ 모바일특구 구축 사업의 사업 시행주체가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지자체로 변경된 사유 ○ 주파수의 이용과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자체 보다는 MFT사업 시행주체가 한국전파진흥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여부 ○ MFT 테스트베드를 대기업에서 이미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참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, 중소기업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	

3. 기상청소관

가. 기상청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<p>정책홍보 관리분야</p>	<p><인사 관련> ○ 기상청의 예보업무 담당부서가 업무과중 등으로 인하여 기피부서로 인식되고 있는데, 이에 대한 개선 대책</p> <p><조직 관련> ○ 관측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35개소의 기상관측소 중 15개소를 기상대로 승격하여 재편하는 계획의 추진상황 ○ 대구지방기상청 승격을 위한 추진계획 ○ 수치예보과를 국(局)수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함</p> <p><R&D 관련> ○ 기상R&D 304억원의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너무 적으며, 가시적 성과 도출 대책</p> <p><국제협력 관련> ○ 북한과의 기상협력 확대 계획</p>	
<p>정보화 분야</p>	<p><홈페이지 및 화상시스템> ○ 기상청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한 사유와 홈페이지 서버의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대책 ○ 기상대급까지 연결된 화상시스템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방안 필요 ○ 기상청 본청 홈페이지 보안서버 구축 대책</p> <p><슈퍼컴퓨터> ○ 슈퍼컴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데, 비상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며, 광주광역시에 건립되고 있는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시스템을 이동하는데 대한 견해</p>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슈퍼컴 운영 전용건물 건설보다는 전문인력의 충분한 확보 등 운영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며, 인프라를 늘리는 것 보다 슈퍼컴 운영을 최적화 하는 대책 마련 필요 ○슈퍼컴 2호기가 기상청에 설치 안 된 사유와 슈퍼컴 3호기에 대한 운영계획 	
<p>예보 분야</p>	<p><예보정확도 등 예보정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태풍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슈퍼컴 도입 등 장비도입보다 업무능력을 향상 시킬 것 ○기상청의 가뭄판단지수인 파머가뭄지수는 한국 환경에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 ○특보 대상 기상현상 발생시에 특보를 발표하지 않은 경우를 특보 적중률 계산에 미반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. 적중률 개선방안 마련 필요 ○최근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매년 7조원 정도 임. 물론 직접적 책임은 있지 않지만 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보정확도를 높여야 함 ○황사예보에 대한 정확도 향상 대책 ○기상청은 전화 응대 때문에 예보업무를 제대로 수행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. 콜 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, 이에 대한 내용 및 추진현황 <p><기상재해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기상청의 역할이라고 할 때 잘못된 건설교통부의 홍수에 대한 설계기준을 바로잡기 위한 기상청의 계획 ○안개 우발지역에 대한 표지판 설치가 미흡한데 직접적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하는 조치가 필요 ○안개에 대한 특보기준이 없어 경찰청,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의 대응이 힘들었음.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<수치예보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리나라와 같은 위도의 국가별 평가에서 전지구모델의 500hPa의 고도오차 순위가 낮은 사유 ○ 현재의 수치예보모델은 국지적 집중호우예측에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필요 ○ 강원도는 산악이 많아 예보가 어려운데, 국지수치예보시스템을 구성하여 시행할 계획 <p><디지털예보서비스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디지털예보의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디지털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○ 디지털예보의 국민인지도가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 	
관측분야	<p><관측정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상관측선 건조 기간 중 해양관측 보완방안 ○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과 더불어 위원회 구성, 기상청의 조정역할 강화 및 예산확보를 위한 논리를 준비할 것 ○ 온도·습도계의 검교정은 공무원이 해야할 업무가 아니므로 민간에게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○ 서해상의 관측이 예보에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 ○ 황사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황사발원지에 대한 관측능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 <p><기상장비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기상관측선은 150톤급 1대로 23년된 노후화된 선박이므로 기상관측선을 신규로 건조하는 방안 ○ 외국산 기상장비들이 고장시 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상장비를 국산화하기 위한 대책 ○ 외국산 기상장비 수입시 해당업체와 계약체결 조건에 A/S나 제품보증에 대한 사항을 세밀하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계 검토할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황사관측장비 낙뢰피해 및 부이(해상기상관측장비) 와이어 절단 등에 대한 피해저감 대책 마련 할 것 ○ 집중호우 등 악기상 예상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무선방식으로 교체방안 검토할 것 ○ 내구연수가 지난 자동기상관측장비에 대한 교체 계획과 대책 <p><기상레이더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상레이더 외자구매(가격·규격분리 입찰)시 세계에서 이미 검증된 최적의 제품이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○ 기상레이더의 내구연수가 10년이지만 잘 관리하고 보수하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할 것 <p><지진·지진해일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진관측망은 83개로 일본의 1,000여개소와 비교해 볼 때 그 1/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해저지진계는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○ 북핵 지진 관련하여 기상청의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지만, 전체 정부차원의 업무분장 상한계로 인해 업무의 혼선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함 ○ 법적으로 기상청은 정부기관이며,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은 민간기관에 해당됨. 지진관측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대응 및 현업기능은 기상청에서 수행하고 있고,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핵과 관련 있는지 여부와 CTBT(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: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)에 따른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보고의무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진관측 및 분석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문제임.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관측 장비를 통합하여 분석하면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것임 ○ 북한 핵실험 후 대기 중 공기에 유포된 기체에 대한 연구분석을 실시했는지 여부 ○ 기상청이 가진 지진탐지기계,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탐지기계의 기능이 유사한데, 지진과에 따라 인공지진과 자연지진으로 나누어 업무를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○ 기상청은 국가기관이고 지질자원연구원은 정부 출연기관에 해당됨. 법령상 업무분장으로 인해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므로 기상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	
기후관련	<p><기후변화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반도 평균온도 상승률이 지구평균의 경우보다 2.5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, 이에 대한 대책 ○ 기후자료 DB 구축 및 구성이 다소 부진한 사유 ○ 제주고산 대기감시관측소 신설 등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 시스템 구축 대책 <p><기상산업육성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상산업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산업자원부와 협력하여 민간기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. ○ 기상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임 ○ 민간예보사업의 도입 시기 및 이에 대한 진흥 대책, 기상청과 민간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견해 ○ 민간기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상정보 제공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</p> <p><항공기상정보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항공예보자료는 군항공기에도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 및 북한지역에 대한 항공기상정보 제고 여부 ○ 윈드프로파일러는 고층기상관측장비로 저층난류나 돌풍탐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데 울산공항에서는 채택한 사유 ○ 아시아나 항공기 우박관련 사고의 책임에 대한 기상청의 입장 	
기상교육	<p><기상교육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학과 협조하여 기상정보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인 특수대학원 신설 추진 필요 ○ 도서벽지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적절한 사업임 <p><기상역사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상역사박물관 건립 계획 	

1) 기상연구소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기상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상연구소는 현업에서 활용하는 S/W 개발을 주로 하고 있음. 필요한 부분은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	

2) 부산지방기상청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행정분야	○ 부산지방기상청 주변 도시화에 따른 기상관측 환경 훼손에 대한 대책으로 청사 이전에 대한 기상청의 입장	

3) 광주지방기상청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행정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케팅 관련업체에 전직 기상청 직원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○ 작년 폭설대란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폭설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확대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○ 부산지방기상청과 비교하여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가 과다함 ○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많은 응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○ 기상관측소의 인력을 2인에서 1인으로 줄인 것으로 인한 문제점 및 관측자료 실효성 확보 대책 	
예보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상예보구역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 ○ 호남지역은 도서지방이 많고 남쪽에 위치하여 해양기상 관측이 중요함. 새로운 장비 및 전문 인력 보강에 노력할 것 ○ 전남지방은 섬과 어민들이 많음으로, 육상주민과는 다른 날씨정보가 필요함. 이를 위해 특화된 기상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 ○ 2006년도에 태풍이 전남지방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. 지방청의 태풍업무 수행 구체적 역할 제시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○ 광주지방기상청의 특보정확도가 작년에는 1위 였는데, 올해는 4위로 떨어졌음. 호우특보 정확도 향상 대책 필요	
관측분야	○ 자동적설관측망 확충 계획 및 대책 ○ 기상장비 긴급보수 횟수가 다른 지방청에 비해 많고, 산악에 배치된 장비가 많아 긴급수리에 애로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	
정보화분야	○ 광주지방기상청 홈페이지 접속자가 본청의 1/100 수준임. 지역 특성에 맞는 홈페이지 콘텐츠를 개발할 것	

4) 강원지방기상청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행정분야	○ 강원지방기상청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, 강릉시와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	
예보분야	○ 강원도 지역 기상예보 편차가 타 지역에 비해 심한 사유	
관측분야	○ 강원도 기상레이더가 노후화 되어있는데, 교체 계획 및 강원도 지역 관측소를 좀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에 대한 기상청의 입장	

5) 제주지방기상청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행정분야	○ 제주특별자치도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데 이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기상청의 견해	

Ⅲ.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

1. 과학기술부소관

(1) 과학기술부

-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센터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수직발사의 기술적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, 한·러 기술보호협정(TSA) 때문에 핵심·원천기술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KSLV-1사업을 재검토하며,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기획 수립 및 기초기술 프로그램 신설방안을 강구할 것
- 생물정보의 외국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의 기존 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에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가 아닌 독립적인 별도의 기구로 '국가유전체연구센터'를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
- 나노종합팹센터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
- 지금까지의 국가 방사능 방재대책은 원전사고 중심이었으나 핵폭발 등을 포함하여, 핵폭발시 국민들의 대응 매뉴얼 등을 개발·보급하는 등 국가 방사능 방재계획의 범위를 확대하고, 주변국의 핵실험 탐지방안도 마련할 것
- 주변국의 핵실험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 차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,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산하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동해서 장비도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
- 원자력병원과 부설 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회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원자력병원의 경영수익을 R&D에 투자되도록 할 것

- 역학조사 대상에서 종사자 및 주변 주민들의 태아 및 2세를 포함시키고, 1단계에서 이상 징후가 없더라도 2단계에서 불완전 염색체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
- 국립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할 것
-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조직 혁신과정에서 조직 관리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
- 연구참여제한조치를 받은 비리연구자들이 조치기간 중에도 정부부처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는 바, 비리연구자에 대하여 전 정부부처에서 연구 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
-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산업부분과 치우친 R&D투자를 기초공공 분야에 비중을 두어 확대하고, 기초연구 비중 확대 목표(25%) 달성과 관련하여 기초연구비 산정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
- 정부출연(연)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민간 이양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할 것
- 산업관련 출연(연)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체질개선방안을 마련할 것
- 위성항법시스템(GNSS :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)과 같은 전 부처 추진 사업에 대해 중복투자를 점검하는 Screen Group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

- 나노기술 추진과 관련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대형종합시설을 각각 추진하고 있으며, 정보통신부도 USN Fab을 구축하려고 하는 바, 중복으로 투자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
- 에너지 관련 특별회계·기금을 소관부처 사업에만 투자하고 타부처 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에너지 관련 특별회계·기금의 범부처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
- 3개 연구회 등록 특허 건수가 2,772건, 투입된 연구개발비 7,400억원, 유지비용이 십수억원인데도 특허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특허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
-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이 2008년경에 마무리될 예정인 바, 후속 사업 계획 및 추진 전략을 마련할 것
- 차세대성장동력 사업단장(1명)이 연구내용으로 창업하고 있음. 동일 사업 영역에서의 창업은 부도덕함. 제도적으로 대비할 것
- 정책연구사업이 과학기술정책수립 및 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용역사업관리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연구의 진도 및 결과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
-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원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
- 정부출연(연) 연구중단 및 중복 연구사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, 연구기관 장비 중복구입 방지 및 공동 활용 촉진을 위한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
- R&D투자규모가 발표 자료별로 수치가 상이하므로, R&D통계를 일관되게 작성·관리하도록 할 것

- 연구성과 평가시 논문의 양적인 측면만 강조할 경우 부실논문 양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논문의 질적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
- 정부출연연구사업에서 발생하는 특허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
- 특허청의 제안 등을 반영하여 특허출원·등록의 중복신고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
-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
- 과학기술 현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40대 이하 과학기술자의 의견이 과학기술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다수 선임될 수 있도록 할 것
-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세제혜택, 기반시설 구축 등 대폭적인 정부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
-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매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
- 한국수력원자력(주)이 고리위전 1호기의 6개월이상 정지를 감수하면서까지 당초 예상보다 6개월이나 늦게 연장운전 신청을 한 경위를 조사하고, 연장운전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철저히 할 것

(2) 한국과학기술원

- 나노팹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
- 해외 우수학생 유치시 외국인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
-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
- 상임감사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조사할 것

(3) 광주과학기술원

- 학사과정을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
- 특허의 경우 그 유지비용에 비하여 기술이전 실적이 적으며, 해외기술이전 실적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
- 원장 등 임원이 광주과학기술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임원의 사외이사 금지규정을 조속히 신설하여 시행할 것

(4)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

- 핵실험 감시능력 제고를 위한 방사선환경감시 장비를 확충하고 국내에서 개발한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
- 방사선위치추적시스템과 관련하여 위치추적기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방사선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할 것
- 방사선 관련 재활용 고철을 이용하는 철강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능물질의 탐지를 위한 장비가 설치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

- 동해상의 방사능을 수층별로 감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
-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비해 규모와 방사선 세기가 상대적으로 큰 치료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규제방안을 강구할 것
- 핵융합연구장치(KSTAR)가 핵융합연구개발의 주요한 시설임에도 방사선발생장치로 분류되어 관리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핵융합 연구시설 등에 대한 합리적인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
-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매년 실시하는 원자력안전 등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대국민의 체감안전 성과 기술안전성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
-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자력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 방사능 방재, 방호교육을 강화할 것
- 원자력안전학교의 프로그램에 교육 수요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
- 월성원전현장방재지휘센터의 헬기장 건설과 용도폐지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데 대하여 조치할 것
- 월성원전현장방재지휘센터의 배수로 축조 공사비용을 한국수력원자력(주)에 전가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것
- 현장방재지휘센터(월성, 울진) 부지매입비용관련 한국수력원자력(주)와의 분담비율의 적정성에 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
- 울진원전현장방재지휘센터 부지선정 및 진입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

(5)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

- 연구원 부지를 조속히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DGIST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
- 정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
- 뛰어난 스타급 연구원을 영입하는 등 우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

(6) 한국과학문화재단

- 과학문화도시 운영시 문화관광부의 문화중심도시에 대한 사례를 참고할 것
- 한국과학문화재단 회계내규 중 법률에 위반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부당하게 수의계약되지 않도록 할 것
- 연간 예산액의 상당부분이 12월에 지출되었는 바, 회계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것
-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예산을 지원하여 제작한 영상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
- 영상콘텐츠풀 구축 사업예산 중 24억원이 현재까지 계약도 되지 않는 등 예산집행이 부진한데 과학기술부는 분기별로 예산집행율을 점검하는 등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감시·감독을 강화할 것

(7) 기초기술연구회

- 상임감사의 업무추진비가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
-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외부위원 2인을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, 팩스로 투표하는 것은 무기명 투표 원칙에 위배되므로 시정조치 할 것(3개연구회 공통)
- 산·학·연 협력연구나 외부인력 활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
- 우수연구인력 유출을 막기 위하여 연구원들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
- 우수한 인력을 장애여부에 상관없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도록 할 것

(8)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

- 연구장비 DB를 구축함으로써 출연(연)의 공동연구장비 활용률을 높이도록 할 것이며, DB 구축시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
-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중요한 기능이 첨단장비 개발·설치·운영인데, 1억원 이상 장비 중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58.3%나 되어 동 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

- 장비도입시 장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, 장비도입의 시급 성과 장비금액 등에 가중치가 잘못 부여되지 않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것
- 민간수탁 및 기술이전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

(9) (부설)국가수리과학연구소

- 연구소 업적 증진을 위해 해외연구소와의 협력 및 우수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

(10) (부설)핵융합연구센터

- 미래 핵융합발전소 건설시장 주도를 위해 실증용 발전소 건설 기술력의 우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한국형 상용 핵융합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
- KSTAR, ITER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인력활용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할 것
- KSTAR 장치의 조립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장치운영방안을 마련할 것
- 장기계획과 대규모 예산투자가 필요한 ITER사업에 대한 소요 예산확보 및 인력투입방안을 강구할 것
- 국가의 전략적 차원에서 핵융합에너지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·학·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

- 기관설립과 핵융합에너지개발의 본격추진에 따른 기관운영 기반을 구축하고, 효과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마련하며, ITER 국내전담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독립법인화 방안을 강구할 것

(11) 산업기술연구회

-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인력 재교육 및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인 사이버연수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
- 소관기관 평가와 관련하여 연구기관별 기관운영 및 연구개발분야의 차이로 인하여 일률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평가 방안을 강구할 것
- 현행 기관평가제도는 단기적인 성과도출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고, 중장기 원천 기술에 대하여 소홀해 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
- 출연연 산업재산권 관리가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성과관리 DB 구축도 일부 기관만 전산화 되어있고 상호 호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

(12) 한국기계연구원

- 최근 발생한 자기부상열차 사고와 관련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인력수급 및 장비관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
- 승강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성 검사 업무보다는 품질이나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

(13) 한국화학연구원

- 한국화학연구원이 화학관련 산학연 지원 및 공동연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연구장비를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

(14) (부설)안전성평가연구소

- 국내 안전·유해성 평가기준 및 시험기술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
- 안전성평가 자료의 선진국 의존도를 줄이고 이용자의 비용 및 시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

(15) 공공기술연구회

- 임직원 임명시 부적절한 인사(일명 낙하산 인사)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과학기술분야에 적합한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(연구회 공통)
- 원장 및 이사가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도록 할 것
- 지적재산권의 유지관리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여 적자상태를 보이는 불합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

(16) 한국표준과학연구원

- 대덕특구내 7개 출연(연) 공동소유 아파트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174세대중 공실률이 40%에 육박하고 있고 연구기관들이 계약조건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재건축 시행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상태이므로 이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할 것
- 2005년 감사원 감사 당시 연차수당 과다지급, 인건비로 장려금지급, 실제와 다른 연구원별 과제참여율 D/B자료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, 부적절하게 사용된 예산은 회수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할 것

(17) 한국해양연구원

- 독도연구사업은 경제·사회적 파급효과 이외의 가치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차질없는 연구수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

(18) (부설)극지연구소

- 세종과학기지 근무인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예외 적용이 어렵다면 관련법률의 개정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

(19)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

- 민간수탁과제 수행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
- 안전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하여 연구원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

(20) 한국수력원자력(주) 영광원자력본부

- 소외전원상실 사고에 대비한 공용비상디젤발전기 추가운영 등의 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
- 원전소방용역업체에 대한 등록기준을 철저히 관리하기 바라며, 용역수행 중에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
- 월성원전의 사용후 핵연료운반 용기를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확보하며 관련 규정 개정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
- 영광원전 해수사용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허가대책을 강구할 것
- 한국수력원자력(주)이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종료일을 과학기술부 관련규정에 의한 '최초임계일 기준'을 '최초가동일 기준'으로 변경한 경위를 조사할 것
- 3년마다 실시하는 원전안전점검 용역업체의 선정과 관련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원전종사자와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

2. 정보통신부소관

(1) 정보통신부

- 정보통신부 산하 위원회 중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은 위원회를 정비할 것
- 정보통신부 자체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위촉과정을 투명화하고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
- 신기술·기업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해 향후 각급 산하기관 임직원 채용시 신원조사를 철저히 할 것
-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인터넷 광고시장에서의 부정클릭으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오버추어(Overture)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
-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시행과정에서 위법성 논란과 본인확인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을 강구할 것
- 법적근거가 없는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 중계서비스를 통한 인증서 발급으로 인해 개인정보유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
- 중앙전파관리소 제주분소 이전 신축 직후 발생한 침수피해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부지선정과정의 의혹을 해소할 것
-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후 정식인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개선할 것

- 주파수 공유기술을 개발하여 효율성이 높은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
- IT839정책의 당초 추진 시 제시되었던 전망치들이 실제 시장에서의 성과와 거리가 있는 만큼 IT839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
- 정부의 요금규제정책의 개선
 - '06년 9월에 있었던 무선데이터 요금인하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는 과도한 정부 개입을 지양할 것
 - 가계의 통신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소비자중심의 요금정책을 추진할 것
 -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요금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할 것
- 결합판매 규제 완화 시 공정경쟁 여건 보장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
- 인터넷전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망 이용대가 부과 정책 개선, 시내 전화와 동일한 번호체계 부여 등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검토할 것
- 이동전화 멤버십 미사용 포인트의 소멸, 비가입자의 멤버십 관리 비용부담 등 멤버십 제도 현황을 파악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제고시킬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
- 폐 휴대폰을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
- 3세대 이동통신(3G)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중심의 경쟁체제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, LGT의 동기식 3세대 이동통신(EVDO rA) 설비설치 승인시 기업간 형평성,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

- 법원의 감청 영장 발부건수와 통신사업자의 감청 협조건수 간에 차이가 있어, 불법감청 의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혹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
- 통신재난시 통신 사업자가 긴급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
- 신규 융합서비스 도입이 지연됨에 따라 이용자 복지와 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IT산업과 방송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융합을 적극 추진할 것
- u-IT클러스터(USN Fab) 구축 관련 인천유치 사유, 사업타당성, 중복가능성, 수행주체(정부여부), 생산시설 여부 등의 문제가 있는 바, 과기장관회의나 나노산업발전위원회 등에서 객관적 논의를 거쳐 수정할 사항은 수정하고 국회의 검토를 거치는 등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것
- 교수 IT 해외연수사업과 관련하여 연수 기간중 국내에 체류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였는바 연수비 재정산 등 시정조치 할 것
- 휴대폰 소프트웨어(SW) A/S와 관련하여 SW 업그레이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발생해도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A/S를 받아야 하는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
- IT분야 지적재산권을 별도 관리하기 위한 특화된 기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지적재산권관리청 설립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

- 우전시스텍의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수출에 기여하는 아이템인지 여부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매 분기별 사업화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
- 법적 위임범위에 논란이 있는 케이블TV 셋탑박스의 기술기준의 내용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
- 군입대 장병들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조치를 강구할 것
-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의 보안서버보급 방안을 마련할 것
-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불법 위치정보 조회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강구할 것
- 포털사이트 상에서의 신고접수방법 및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, 포털피해구제신고센터를 공동운영하게 하는 등 포털사이트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
- 친북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적극적인 장관의 이행명령을 행사할 것
- '05, '06년 GS(Good Software)인증 우선구매제도의 적용업체가 4개업체에 집중되고,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(KIPA)검토 및 정보통신부 결재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
- 인터넷의 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원보강 대책을 마련할 것
- 휴대폰의 모바일 콘텐츠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리감독 및 차단사이트 안내방법 개선 등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

- 공공SW기반 인터넷 뱅킹사업은 보안이 생명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
- 한미 FTA 통신·전자상거래분야 협상에서 미국측이 요구한 기술의 중립성(정부개입 불허)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
-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의 해외출장경비의 적정성에 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
- 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통신신용불량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
- 해외 친북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
- 전파연구소에서 인증해 준 단말기의 국제 TETRA 규격 일치 여부에 대한 공개 측정시험, 경찰청 TETRA 시스템의 상호 호환성 시험과 해당 사업 제안서가 요구하는 기능의 충족여부에 대한 공개 측정시험을 실시할 것

(2) 우정사업본부

- 방송·통신 융합기구 출범 전에 우정사업본부를 외청 또는 공사화하는 등 독립기관으로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
- 폭증하는 수도권 소포우편물에 대한 처리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
- 용산역 인근 철도공사 부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서울우편집중국의 이전을 위한 부지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
- 우체국금융서비스 TV뱅킹 사용률이 저조하므로, 모바일 뱅킹(Mobile Banking)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

(3) 전남체신청

- 중고PC 조달계획 수립, 정보화 교육 실시 등 전남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대책을 강구할 것
- 전남지역의 우편물 배달사고, 분실, 파손, 훼손이 많으니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
- 고객상담실, 365자동화코너 설치 확대 등 금융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
- 서광주우체국만 서구, 남구를 관할하고 있으므로 남구에 남광주우체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

(4) 한국정보사회진흥원

- 서울시 요일제 RFID(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) 시스템 등 타기관 RFID 사업 관련하여 개인정보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,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법제정 등을 검토할 것
-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찰 가운데 상당수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것
- u-Health 선도 사업을 통해 도출되는 법·제도 개선사항을 『u-Health 중·장기 활성화 계획』에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와 상시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
-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(IPv6) 전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
- IT가 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한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할 것

- 인터넷 광고에 대한 이용자 보호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
- 광대역 통합망(BcN) 사업 추진에 있어 업체간 분쟁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의 품질보증제도를 강구할 것
- RFID 운영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자파의 유해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
- 정보기술아키텍처(ITA)전담기관으로서 ITA전담인력 등 제반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 및 기술지원을 시행할 것
- 농어촌 초고속인터넷에 양방향 위성방식을 택해 고품질의 인터넷 제공 방안을 강구할 것
-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·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를 포괄하는 건교부의 인텔리전트빌딩 인증제가 시행될 경우, 이중 심사 청구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
- IT중소벤처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에 대한 심층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정책의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 조정방안을 강구할 것

(5) 정보통신연구진흥원

- 외국인 유학생 유치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
- 국제공동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국내 연구개발(R&D)센터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관리대책을 강구할 것
-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의페이백(pay-back)시스템과 같은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

- 기술이전 성과지표로 기술 발굴건수와 기술이전 성공율 등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
- 개발기술을 사업화·실용화 하기 위해 정부에서 휴면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을 논의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으므로 휴면특허이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
- 해외초빙교수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외국교수를 초빙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
- 우전시스텍에 대한 분기별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사업지원의 적정성, 지원성과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것
- 정보통신연구진흥원(IITA) 전문위원(PM : Project Manager) 확대 및 성과평가 기준 재검토 등 PM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
- 기금고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
- IT지적재산권센터에서 지적재산권 분쟁관련 자료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
- IT분야 해외유학지원장학금을 수혜받은 유학생의 국내 복귀방안을 마련할 것

(6) 한국정보문화진흥원

-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지역별 균형있는 지원과 A/S기간 통일, 본인 부담금 납부기간 연장 등 수혜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
- 사행성 도박으로 인해 검찰에 압류된 PC가 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
- 고령층, 비문해자, 새터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도서·농어촌 지역의 정보화 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
- 정보격차해소사업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해외 IT전문가초청 연수 수료생 및 개도국 정보접근센터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의 체계적인 사업성과 분석에 기초하여 차별화된 수행방안을 마련할 것
-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인터넷중독 예방 상담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, 지역별 균형있는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
-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과제 선정시 활용성 높은 데이터베이스(DB)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과제선정 기준을 개선할 것
- 상담사를 양성하여 각급 군부대에 배치하는 등 국군장병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

(7)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

- 원장공모 과정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등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 점을 검토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헤드헌팅 수수료 등을 반납 조치할 것
- 공공부문 SW구매제도의 문제점과 SW업체가 합리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개선할 것
-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의 업무중복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데,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
- SW관련 통계작업이 일관성이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
- 디지털콘텐츠(DC)의 공정거래와 거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DC산업 활성화를 위한 DC거래인증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것
- 높은 SW로열티 지급실정을 고려할 때 공개SW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바, 리눅스 데스크톱 교육 등 일반 사용층 확산을 통한 공개SW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
- 마케팅마스터플랜 등을 뒤늦게 작성하는 등 무계획적인 운영의 개선과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(DMC)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
- 해외IT지원센터(iPark)가 통합되기 전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조직 및 업무조정 계획을 수립할 것
-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통해 IT산업분야에서 제조업 위주의 불균형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

(8) 한국정보보호진흥원

- 피싱(Phishing¹⁾)의 지속적인 증가 및 다양화에 따라 휴면홈페이지 추가정리,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, 홍보 등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
-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 중 악성코드를 유포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을 정리할 것
- 인터넷전화(VoIP), 댓글알림 등 신종 스팸기술의 출현예상 및 다양화에 따라 신규 스팸 차단 대책과 스팸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
- 중국 해커들에 의한 게임아이템 등 국부가 유출됨에 따라,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(M-OTP : Mobile-One Time Password)시스템을 개발하여 게임업체 및 이용자에 제공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것
- 구글검색을 통한 링크파일 등의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
- 파산선고('06. 8. 25)를 받은 네띠앙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고 사후대책을 보고할 것
- 국제상호인정협정(CCRA :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greement) 가입 및 공공기관 납품시 평가의무화에 따른 정보보호 제품의 평가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평가적체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

1) 개인정보(private data)와 낚시(fishing)의 합성어로 유명업체의 위장홈페이지를 만든 후 불특정다수 이메일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위장된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현혹하여 개인정보를 빼내는 행위

- 기업의 정보보호 인력향상을 위해 최고개인정보책임자(CPO : Chief Privacy Officer), 최고정보보호책임자(CSO : Chief Security Officer), 보안전담조직 등을 위한 교육 및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와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
- P2P(peer to peer)와 중고PC에 대한 지속적인 개인정보 노출점검 및 실태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방지 방안을 강구할 것

(9) 한국인터넷진흥원

- IPv4 주소 고갈에 대비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
- 진흥원에 도메인 등록비 납부시 발생하는 청구지불(PG : Payment Gateway) 수수료는 도메인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비용인데 전액 등록대행사가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등록대행사와의 재계약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
- 모바일주소(WINC : Wireless Internet Numbers for Contents) 주소가 실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바일 검색포털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
-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(ICANN)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고, 외국과의 인터넷주소분쟁에서 한국의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영어매뉴얼을 작성하는 등의 실질적 대책을 강구할 것

(10) 한국전파진흥원

- 한국전파진흥원이 수입예산 감소추세에 있는데 수익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
- 불합격 무선국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동일한 사유로 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는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검사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 검사인력 확보방안 등 무선국 검사업무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

3. 기상청소관

(1) 기상청

-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인공지진과 자연지진을 포함한 기상청과 지질자원연구원간의 지진업무의 일원화 방안을 마련할 것
- 기상레이더 외자구매시 가격·규격분리입찰방식 등으로 최적의 제품이 선정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
-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은 기상예보의 정확도 제고, 장비중복구매 방지에 의한 예산절감 등 중요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시행할 것
- (가칭) 남북기상교류위원회 구성하는 등 남북기상분야 협력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
- 영세한 기상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국내 우수대학과 협력하여 기상정보의 경제적 활용에 관한 특수대학원 과정을 신설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
- 슈퍼컴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, 적절한 예산배정 등 슈퍼컴 적정운영대책을 마련할 것
- 내구년수가 지난 자동기상관측장비에 대한 교체계획 및 긴급보수 대책을 마련할 것
- 기상청이 전화 응대로 인해 예보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콜센터 설립 등 대책을 마련할 것
- 기상레이더는 교체보다 보수 및 유지운영이 중요하므로 기기장애로 인한 정지시간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

- 집중호우 예측을 위해 서해상의 해상관측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
- 기상예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상관측선 확보에 노력할 것
- 경북지역과 경남지역은 강수량은 연간 360mm, 적설량은 연간 8mm 차이가 있음.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대구경북지역의 기상청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
- 기상청은 가뭄판단 기준으로 사용하는 파머가뭄지수는 1963년 미국의 대평원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한국실정에 맞지 아니하므로 한국의 지형 및 환경에 맞는 새 가뭄지수를 개발할 것
- 기상청 인력 중 실제 예보가능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, 또한 예보부서가 업무과중 등으로 기피부서화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
- 특보대상 기상현상이 발생했음에도 특보를 발표하지 않은 경우를 적중률 집계에 미반영함으로써 특보를 전혀 하지 않으면 적중률이 100%가 되는 모순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
- 집중호우 모델의 경우 실제 관측치와 예보모델의 값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수치예보모델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예보관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
-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와이어 로프 절단, 황사관측장비의 낙뢰로 인한 황사관측장비 피해, 수직측풍장비 운용상 네트워크 장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

- 온도 및 습도계 교정업무를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가 아니므로 민간 검교정 대행기관을 지정하는 등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 기상청은 지진관측 등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것
- 디지털예보 시험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면, 확실한 결과 분석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시험운영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며, 디지털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
- 초기단계에 있는 민간기상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
- 기상이변시 기상청 홈페이지 접속 폭주로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 대국민 기상서비스 제공에 큰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
- 강원도지역에 빈발하는 국지적인 돌발 악기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강원지방기상청 내에 국지악기상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

(2) 광주지방기상청

- 전남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특보 및 예보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
- 전남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자동적설관측망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

IV. 특기사항

1. 비공개 국정감사 실시

- 일 시 : 2006년 10월 30일(월) 10:00 (과학기술부 종합감사)
- 장 소 :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의실
- 내 용 : 북한 핵실험관련 보고

※ 비공개 국정감사 실시 전 제262회국회(정기회) 제7차위원회를 개최하여 북한 핵실험관련 보고를 듣기 위하여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일부를 비공개로 실시하기로 의결함.

2. 국정감사 중 현장시찰활동

- 2006년 10월 17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실시 중 초전도핵융합에너지개발 연구동을 시찰하여 동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관련 설비를 시찰함.
- 2006년 10월 18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실시 중 제로에너지타운 및 수소연료생산저장장치 등을 시찰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상황을 파악함.
- 2006년 10월 24일 한국수력원자력(주)영광원자력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실시 중 영광원자력 발전소 6호기를 시찰하여 원자력 발전관련 안전 및 보안설비를 시찰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함.

